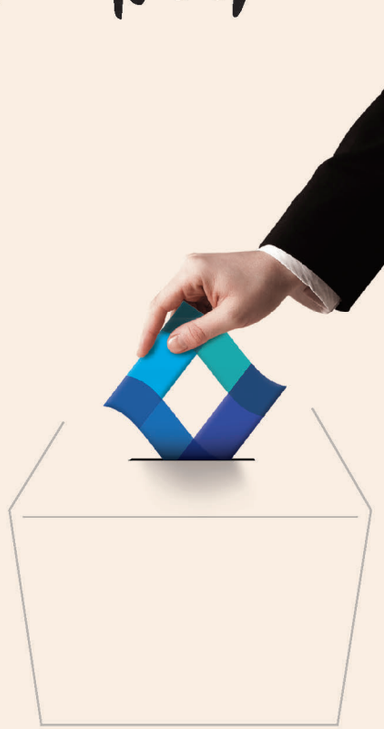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03300
9 788993 721270
ISBN 978-89-93721-27-0

값 15,000원

KPBooks | 서울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호

본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부패기득권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좌절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촛불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9년 대한민국은 붕괴의 시대를 살며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국정시스템을 비롯한 민생경제, 민주주의와 국가인권, 안전사회,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등 국가의 근간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은 상실되었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교체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국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공약은 보기에만 화려한 전단지가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이자 스스로 다짐하는 굳은 맹세입니다. 국민이 집권하는 정권교체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 맹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에 동참하여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약속과 맹세를 지켜봐 주십시오. 변화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4대 비전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2대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 · 인권 강국**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 ·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 · 복지 · 교육 강국**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주요 공약 찾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16
· 권력기관 개혁 26
· 정치 · 선거제도 개혁 35

2.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42



3. 민주 · 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 · 인권 회복 56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66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75
· 노동존중 사회 실현 82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96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08
· 중소 · 중견기업 육성 114
· 과학기술(R&D) 진흥 122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129
· 살기 좋은 농산어촌 139



7. 출산 ·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159

8. 민생 · 복지 · 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67
· 주거 문제 해소 180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88
· 생활비 절감 196
· 국민 휴식권 보장 202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5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225
· 국익우선 협력외교 232
· 평화통일 239

10.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48
· 생활안전 강화 261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275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84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 · 예술 · 체육 296
· 언론 307

C/O/N/T/E/N/T/S

발간사 /004

주요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01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313

수혜계층별
공약 /319

별첨 /373
1. 국민제안 현황 및
우수공약
2. 일자리 100일 계획

4대 비전 12대 약속



01
VISION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적폐청산
- 권력기관 개혁
- 정치 · 선거제도 개혁

2.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3. 민주 · 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 · 인권 회복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외교안보적으로는 미 · 중 2강 대립 구도의 심화 현상,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소규모 개방경제 60년 남북분단체제」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은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 · 박근혜로 대변되는 새누리당 보수 정권은 「국민 성공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며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수십조원의 4대강 예산 낭비」와 「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로 대변되는 부정부패,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각종 사회적폐 뿐이었습니다.

지난 촛불 민심은 이러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깨끗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비선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다수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를 청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소수 부패 권력과 재벌, 1%만을 위한 기득권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촛불의 민심, 국민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선 · 소수권력의 실체적 힘이었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 이명박 ·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아울러 새로운 민심을 반영할 정치권력을 선출하기 위한 「정치 ·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1.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3. **이명박 ·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4.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5.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8.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비전 I

적폐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적폐청산

3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 보관 의무화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

비전 Ⅰ

적폐청산

4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 ·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사학비리 근절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 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적폐청산

5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

비전 Ⅰ

적폐청산

6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 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 장관급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 시스템화 구현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적폐청산

7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 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 추진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적폐청산

8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
-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헌 추진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
-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

개헌 추진 방안

-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
- 개헌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 추진
-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추진

권력기관 개혁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2. 경찰을 **민주 · 안전 · 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3. **감사원 눈치 · 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4.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 **정치댓글 ·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6.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7.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 · 경수사권 조정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검찰 인사 중립성 · 독립성 강화

-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비전 I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 청와대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2 경찰을 **민주 · 안전 · 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 힘없는 노동자 권익 보호, 최저임금 위반 행위 철저히 단속

+

비전 Ⅰ

3 감사원 눈치 · 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으로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
- 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 헌법에 명시
- 감사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시 비공개 사항도 상임위 보고
-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가정보원(해외안보정보원)도 포함
- 국가정보원 감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역할 강화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4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한편, 헌병, 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

비전 Ⅰ

권력기관 개혁

5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6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청와대, 북악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의 일과를 국민에 투명하게 보고
- 저도(대통령별장)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 기록
- 대통령 직속 경호실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조정

+

비전 I

권력기관 개혁

7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열린 정부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과 정보 공유하는 열린 정부 완성
-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통한 대통령 및 정부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혁신

-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참여 확대 · 강화
-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국민 위한 국민의 공기업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감사 독립성, 독립적 리스크 관리 강화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
- 노동자 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정치·선거제도 개혁



1.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3.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

1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경선제도 도입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정치·선거제도 개혁

2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 예비후보자제도 상시 운영,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등 선거운동방법 확대
  -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돈 안드는 선거 실현
  - 부정부패 등으로 재 ·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 제도화

+

비전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

3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학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
-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당 이외에 시군구당 설치 허용
  - 정당의 원내정당화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
  -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도록 정당 후원회 제도 정비
  -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공개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선거제도 개혁

4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겠습니다

-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 금지
  - 상임위 안건 심사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심사 회피
-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

비전 I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약속 2

공정한 대한민국

왜 공정한 대한민국인가?

- 국민의 행복은「경제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제성장은 사회 각 구성원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아 최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출발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납득 가능한「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합함이 오랜 역사 속에 입증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기술의 발전」과「자본의 집중」은 경제력의 격차를 심화시켜 왔고, 경제력의 격차는 불평등을 가속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간 더욱 더 가속화되어 왔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박정희 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소수 재벌권력으로의 경제력 집중, 다수 국민의 소외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 개정으로「경제민주화」가 헌법이념으로 삽입되었음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 「경제민주화」란「포용적 성장」과「공정한 분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다수 국민이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상법」이나「공정거래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세(稅)부담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세계 각 국과 IMF, OEC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앞 다투어「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수가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도 삼성 등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은「경제민주화」를 살아있는 헌법이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6.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0. **국민연금**을 정치 · 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 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 전자투표제 · 서면투표제를 도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자회사 ·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 강화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3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을 설치 추진

-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

비전 I

경제민주화

4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 개혁

-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기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집행 역량 강화
-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역할 강화

공정위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 등을 위임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경제민주화

6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 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
  - 임금분포의 기본 내역을 공개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결정 협상력을 제고

경제민주화

7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 · 지원 방안 마련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
  -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제한 : 영업시간 제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무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경제민주화

8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경제민주화

9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시장교란 행위 판단 여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경제민주화

10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성
- 유명무실화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 · 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 · 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

경제민주화

11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 · 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상속 · 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탈루소득 과세 강화

-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개선
-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 상습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추진
-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 추진

+

비전 I

중산층 · 서민 ·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추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으로 중고품 거래 자영업자 지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면제(한시시행)
- 소상공인 · 자영업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국세행정 투명화

- 현 국세청 산하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약속 3

민주 · 인권 강국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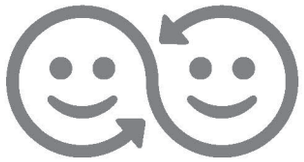
왜 민주 대한민국인가?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탄압」, 「민간인 사찰」, 「공무원 · 교사 · 군법무관 해직사태」, 「MBC · YTN 언론인 해직사태」, 「국정원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 공무원 강제 해직」,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불법사찰의 근절,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제 인권 규범을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 · 인권 회복



1.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2.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3. **개인 · 신용 · 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국선 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
비전 Ⅰ

민주 · 인권 회복

2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과거청산 관련 법제도 정비
-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추진**
-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 · 인권 회복

3 개인 · 신용 · 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 도입**

+

비전 Ⅰ

민주 · 인권 회복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 법제화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

+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 · 인권 회복

5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보도 · 제작 ·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 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 · 제작 ·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 · 제작 · 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
-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

비전 I

민주 · 인권 회복

6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 · 공익법인 제도 혁신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VISION 02-1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 성장)

약속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 · 중견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 좋은 농산어촌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약속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인가?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9년동안 국정농단과 불통, 정책무능으로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 **(5대 붕괴)** ① 국정시스템 붕괴 ② 민생경제 붕괴 ③ 민주주의 · 국가인권 붕괴 ④ 안전사회 붕괴 ⑤ 남북관계 · 외교 · 안보 붕괴
  - **(3대 절벽)** ① 성장절벽 ② 인구절벽 ③ 고용절벽

- '5대 붕괴, 3대 절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사회 대수술, 국가대개조가 필요. 특히 '더불어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 더불어 성장은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이중화), 일자리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전략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성장률 숫자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 더불어성장의 핵심과제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양보하고, 노동자가 분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국민 모두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릴 것입니다.
  - 상시 ·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4.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구현

-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실시

+

비전 Ⅱ-1

일자리 창출

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OECD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 한국은 0.4명

-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일자리 창출

3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

☞ p.119 참조

일자리 창출

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1 청년 일자리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
-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3년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NEET 포함, 18~34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로 최초 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대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 확대
-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 휴면 특허의 연계 지원 강화

4-2 新중년 일자리

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

-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제정
- 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 도입
-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적용
-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
-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신중년 전용 폴리텍」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 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센터」 전국 설치
- 귀농 · 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 확대

- 자영업 활성화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
-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입대상 확대 및 지원
-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 소상공인 · 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17년 43만개)

-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수령 대행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중장기적으로,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 형태의 노인 일자리 육성

- 노년부양비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파트타임 근무형태, 월 100만원 내외 임금의 mini-job 육성

4-3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 현재 고용인원(민간기업 500인, 공기업 5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용기준에 매출기준을 추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도 고려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새일센터' 기능 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많은 주요 직종 발굴,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로 경력 · 대상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 좋은 일자리 매칭, 상담부터 사후지원까지 통합지원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 강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
-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 보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 마련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

비전 Ⅱ-1

4-4 사회(고용)안전망 확대 · 강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확대 지원 등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확대

-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확대 · 개편
- 정년 이전 직장을 퇴직한 경우, 최대 3년(단계적으로 정년 도달시기까지 확대)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지역가입자 자격 선택 가능)로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1. 상시 ·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대기업의 ·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기간제 · 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 의무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

- 상시 · 지속적 업무 및 생명 ·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 · 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도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 (현행 월 60만원)
-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2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 · 근로시간 · 성과급 · 퇴직금 · 사회보험 · 복지제도 · 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
-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

3 대기업 ·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4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비전 Ⅱ-1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생활임금제 활성화 근거법 마련).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에게도 확산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

노동존중 사회 실현

1.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노 · 사 · 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3.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4.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5.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90%의 중소 ·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하겠습니다

9.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1.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설립

-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창출
- 논의 의제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를 위한 고용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고용과 연계된 복지영역으로 확대
- ①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②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추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 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비전 Ⅱ-1

노동존중 사회 실현

2 노 · 사 · 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

-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3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체당금제도 확대해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강화

-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
-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 고액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 사회보험 ·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 근로감독 강화

- 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

+

비전 Ⅱ-1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

-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교육
- 노동권의 의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교육

'알바존중법' 도입 등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제6조) 유형을 상세화 하여,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금지되는 폭행(제8조) 행위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 · 정서적 학대 등 포함
- 3개월 계속 근로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계약 포함, 근무기간 90일 이상으로 지급대상 완화)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5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

+

비전 Ⅱ-1

노동존중 사회 실현

6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 · 제도 개선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 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 가압류 남용 제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 · 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 행정지도 중단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7 90%의 중소 ·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미조직노동자 지원조직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이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추진
-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수행

사업장 내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 현행 6개 노동관계법령에서 24가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부재 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절차) 및 임기, 구성(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동자 참여권 보장), 권한(사업장 협정 체결) 등 보장하여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경찰, 소방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비전 Ⅱ-1

노동존중 사회 실현

8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경영참여 보장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9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 복직의무 불이행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

비전 Ⅱ-1

노동존중 사회 실현

10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 · 개정

-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재정립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 도급사업 시 안전 · 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규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11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다변화 지원

택시운전자 근로복지 지원

- 통합 택시 운전자 관리시스템 구축
-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
- 장기 운전자 근골격 질환, 전립선 질환 등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마련
- 택시운전자 쉼터 및 편의시설 확대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점 개선

운송비용 전가금지, 신고포상제 도입 등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가동

약속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왜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인가?

-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준비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 분배 · 소비 모든 측면에서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며, 기업도 큰 변화를 겪고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 문제에만 치중한 근시안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역량을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 맥락성이 결여되어 과학기술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확대 등 잘못된 창조경제에 매몰된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인 과학기술인이 연구실 밖으로 내몰려 사기가 저하되고 한숨은 커져 연구개발 인력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세계가 직면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산업 선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혁신적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이 가져올 사양산업과 없어지는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그 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또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 · 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 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습니다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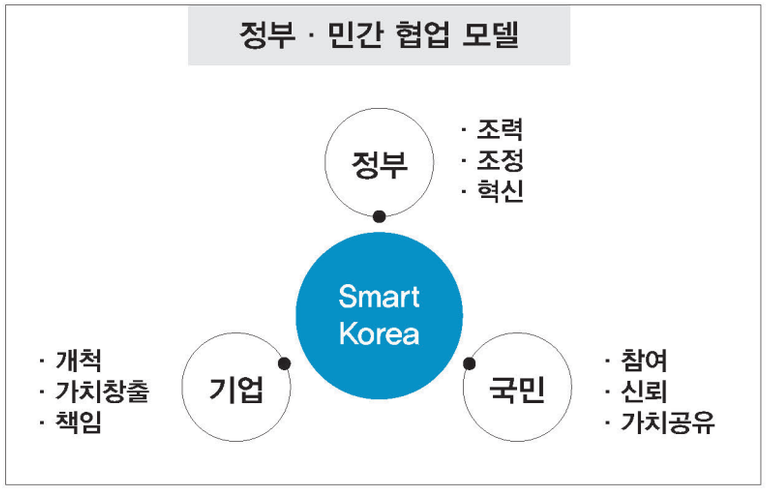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설치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 추진
-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 제도 · 정책 혁신 추진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 · 관 협업체계 구축



+

비전 Ⅱ-1

2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적용
-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 개방
-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크라우드 소싱, 오픈소싱, 오픈플랫폼 지원

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지원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3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3-1 신 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

인프라 투자 혁신 체계 수립을 통한 ICT 인프라 고도화

-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통신 네트워크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책 수립
- 5G 규제 최소화 및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5G 서비스 혁신
-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 · 공공의 필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 공공수요와 민간 IoT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IoT 생태계 조성

미래 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시장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

- 기술 중립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
- 인지 무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적 시장 서비스 모델 개발
- 투자 유인 증대 및 경쟁 활성화에 적합한 주파수 배분 정책 수립
- 소프트웨어 · 콘텐츠 창업 및 기업성장 요건 조성 강화와 ICT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 성장 선순환 사이클 구축
-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데이터요금 인하
- ICT와 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및 유지 체계 · 법제 개선

+

비전 Ⅱ-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마트 생태계 환경에서 C-P-N-D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인 SW 산업 발전 추진
-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자율 · 창의 · 동기유발형 SW 교육 환경 조성
- 5년 동안 1만 명 이상 초중등 SW 교육인력 양성(SW 교육시간 총량 선진국 수준 달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아키텍처 및 SW 등 역량 강화
- 초중생 SW 영재 1만명 이상 양성

3-2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규제 체계 개선

ICT 시장 및 ICT기반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규제 체계 개선

- 신규 진입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정보통신 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및 상생 환경 구축

- ICT 생태계 발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생 환경 강화
- 정보통신 가치사슬 참여 사업간 규제 형평성의 획기적 개선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 · M&A · 회계 규제 완화

- 창업과 스타트업의 M&A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통신 기업의 경쟁 제한적 회계 규제 완화
-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현행 3년) 확대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3-3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

- 인공지능(AI)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지원 · 육성
-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컴퓨팅 환경 강화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 운영 전문 인력 양성
- AR · VR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 산업 전반의 혁신 및 성장을 주도할 커넥티드 카 기술개발 집중 지원
- 핀테크, 3D프린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로 4차산업혁명의 토양 강화

ICT 기반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인터넷 킬러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
- 기술개발에서 표준 · 서비스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 운영

ICT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부처의 일원화
- 각종 기반시설에 IoT 센서를 내장하고, AI · 빅데이터 등과 접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견고한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ICT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혁신 제품 개발 지원 강화
- 정부 R&D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및 지적재산권의 활용도 제고 등 지원

+

비전 Ⅱ-1

3-4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 차세대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지원
- 정부기관 및 사인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강화
-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

남북 ICT 교류 · 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통일 기반 조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4C(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체계 수립 및 실행
- 이를 위하여 융합 교육 중심의 STEAM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체제인 P-TECH 등을 한국형 교육 환경 및 체계에 적합하게 전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법제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통신 분쟁 해결 절차 강화 및 다각화
- 자율적인 통신서비스 피해 구제 절차 상설화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3-5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 기관 조직 문화 개선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

- R&D과제 발굴에 정부 개입 최소화,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 R&D자금의 적기 투자, 지속적 · 체계적 성장 지원
- 기술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 · 육성

시장 활성자로서 정부의 역할 재정립

- 시장 기반의 자발적 혁신 유도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산업 경쟁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업무 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 구축

- 부처별 · 분야별 단편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 기술 · 산업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
- 정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처 통합 정책 평가 체계 구축

정부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정 실현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형 · 선제형 · 개방형 정책 발굴 및 수립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정' 실현
- 정책 분야별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충

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 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 · 스마트카 육성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IoT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 지원
-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 ·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CCS(탄소포집 및 저장),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 노후원전 해체산업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탄소섬유, 광융합 등 고부가가치 핵심 신소재 · 부품기술산업 육성 지원
- 바이오 · 나노, 생명과학, 항공우주,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
-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 ·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 고도화, 확산

- 무인주행/자율주행/자율협력주행기술 고도화, 도심 무인셔틀운행, 시범 스마트 건설. 자율협력주행 맞춤형 커넥티드카 등 산업 육성
- LPG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엔진 개발. 무가선트램 등 친환경 교통 육성
- 도심 대기오염원인 노후오토바이→친환경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산 지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사용 제한 규제 완화

드론산업 육성

- 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통제센터, 격납고 등 조기 확충
- 시범사업분야 확대 및 드론기업 지원 허브 지원
- 야간, 가시권 밖 비행특별허가제 등 제도 개선
- 물류용 드론 개발 지원

+

비전 Ⅱ-1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미래성장동력 확충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육성하여 품위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
-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 ·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에 국가 R&D 투입: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사회 실현
  - 전문 인재 양성기관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구축, 사회적 경제 공교육 과정 전면적 도입, 학습형 일자리 확대로 전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실현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거점 육성
  - 주거+일자리+보육 통합형 /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과 복지서비스를 개선

- 신규 사회 · 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 우리동네어르신 돌봄서비스(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확충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 통합,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 책임 조달 확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 사회적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
- 시민참여형 사회혁신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기금 조성
-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입 비중 확대를 통해 사회책임조달 실현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정보 · 공간 · 자원' 개방을 추진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1.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2. 포기할 수 없는 **조선 · 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습니다
3.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해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전환 · 지원 확대
- 제조업과 IT인력을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마련

'메이커 스페이스'로 1인 제조기업 시대 조성

*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

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 ·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적 지원

- 일정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 및 지식재산권(IP) 제도 재정비 추진

수출품목의 첨단화 · 고부가가치화와 지속적인 수출구조 고도화 추진

- Made in Korea에서 Korean-Made 전략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출 가치 창출과 수출 ·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구조 구축
- 상품과 서비스 결합 수출모델 개발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 마련
- 유망소비재의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추진(한류와 ICT 융합 제품 개발, 스토리텔링 등)

+

비전 Ⅱ-1

2 포기할 수 없는 **조선 · 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 · 해운 상생협력 구축

- 노후화된 연안화물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추진
-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 · 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추진
- 폐선 · 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거나 기존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경우 금융 지원 추진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 메가 컨테이너 선사, 대형 벌크선사 및 중견 인트라아시아 선사 육성
- 금융, 조선, 화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선박발주 및 선박공급(매매, 용선)과 M&A 활성화 여건 조성
- 해양산업의 체계적 ·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 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 확보 및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
-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등 국적선 적취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선박확보 및 선사 육성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3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임금지급 보증제 조속 도입

인공지능 · IT-ICT기술 활용 스마트건설기술 확보 지원 확대

- 해저터널기술 고도화 등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건설업 해외 진출 지원

-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지원

+

비전 Ⅱ-1

4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
-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 강화

■ 효율적인 금융관리 · 감독체계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회복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 금융정책 실명제 및 업무 이력제 도입
- 이메일, 공문 등 업무 지시의 '문서화' 확립
- 전문직 공무원제 확대 등 인사 안정성 확보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5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등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 방안 모색

■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로 주차난 해소

-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트톨링' 시스템 조기 구축

- 정차없이 통행료 자동부과 및 후불고지

■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및 육성근거 마련

-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 추진
-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지원
- 친환경 화물차, 드론, 전기차 등 친환경 · 첨단 물류 장비 개발 지원

■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중소 · 중견기업 육성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2.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4. 중소 ·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의 일원화
- 벤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

+

비전 Ⅱ-1

2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완화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의 생존율 제고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 ·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3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
-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성화 추진**

+

비전 Ⅱ-1

중소 · 중견기업 육성

4 중소 ·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지원 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 대 · 중소기업 동반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지원

■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지역 밀착형 수출 지원을 확대

■ 중소제조업 · 소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밀집지역 환경 획기적 개선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중소 · 중견기업 육성

5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 추가 고용지원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

■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
- 소규모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 · 중견기업 육성

6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영세 ·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추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구성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전통시장 내 화재방지 설비 설치와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제반 규제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슈퍼업종(나들가게) 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 임대인 ·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 지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하여 진출 억제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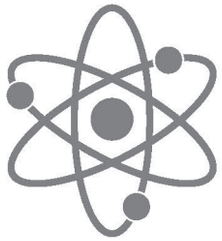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 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 임대료 상승한도 축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과학기술(R&D) 진흥



1.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바꾸겠습니다
2. **청년 과학자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3.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4.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5.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1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바꾸겠습니다

-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자율과 책임을, 국민에게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연구지원 체계로 혁신
-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하여 자율과 책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토록 운영
-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등) 구성원에 이해관계자별, 계층별, 성별 다양성 제고와 실명제 실시하고 관련 통계 마련 및 공개
- 거대과학 연구개발 기획, 연구, 평가의 모든 과정 실명 이력제 실시
- 연구기관 평가를 연구사업 단위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독립평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추진
-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과제단위별 평가결과 공개
- 각종 R&D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 출연연구기관별 단순행정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집중하여 행정부담 완화

+

비전 Ⅱ-1

과학기술(R&D) 진흥

2 청년 과학자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 의무화
- 청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정임금체계 마련하여 처우개선
-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 안정적 연구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진연구자의 과제 기반 테뉴어(Tenure) 제도 도입
-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기술료 등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
- 연구실 근무여건 개선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 마련
- 생애 첫 실험실을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 지원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과학기술(R&D) 진흥

3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연구자 주도의 도전적 연구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
-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초분야 개인연구자 지원 확대
-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 기초분야 연구기간 동안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도정비
- 성과 중심의 평가와 과정 존중의 연구과제 분리
- 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
- 기초분야 개인연구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제도화로 자율성 강화
- 생애 지속적 연구지원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사업 시행

+

비전 Ⅱ-1

과학기술(R&D) 진흥

4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기반 국정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하는 인적 구성 다양화 추진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혁신지식자원 플랫폼이 되도록 연구결과물 및 데이터 개방 (비공개 사유 최소화)
- 과학지식의 다양한 기록물 생산 및 공유 활성화
- 재외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지위 향상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과학기술(R&D) 진흥

5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 연구관리기능의 총괄정비 및 정책대상 특성별 전문화
-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이공계 전문가 충원 확대 및 일반과 전문행정 이중화로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확보
-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
비전 Ⅱ-1

약속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인가?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과제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이 미흡하여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 할 것이며,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와 수도권으로의 권한과 자원집중을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지방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 고속도로와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 농업안정과 농촌경제의 회복, 농업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초고령사회의 탈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식량주권의 회복과 농가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농어촌 교육과 농어민 복지대책의 마련 등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2.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3.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5.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혁신도시 시즌 2)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6.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

비전 Ⅱ-1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 확보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 ·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추진
-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2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 –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 제도 개선
- 지방이양, 통폐합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
-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축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

+

비전 Ⅱ-1

3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

- 주민 발의권의 실질화를 위해 조례 제 · 개정 청구 요건을 광역 · 기초 단위의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화
-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 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 확대
-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 완화

  * 지자체의 주민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총수의 1/20~1/5라는 투표청구권 규정을 완화하고 세분화하여 1/3 투표 요건 완화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하여 주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 신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4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

국회분원 설치

국제기구 유치 추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

+

비전 Ⅱ-1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5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혁신도시 시즌 2)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동시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
- 혁신도시내 혁신기업과 대학 등 지역내 학 · 연 · 산 · 관의 협의체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업생태계 조성
- 혁신도시를 '지능형 스마트도시'로 육성

  * 지능형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도로와 교통,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자원순환경제 기반도시, 스마트 상하수도(수자원) 등 통하여 도시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 추진

- 지역 내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사업 추진
- 부처별 분산 된 도시재생 관련 예산(연 2조원)의 통합 및 효과적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 구축

- 지역산업 육성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업그레이드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지원 제공

  * 지방 이전 대기업 본사 종사자수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감면, 지역별 발전정도와 고용효과에 기반해 법인세율 차등적으로 인하
  * 신규 추가고용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입지지역 개발시 복합지원시설(주거, 연구시설, 생산시설 등) 건립 지원

+

비전 Ⅱ-1

6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의 확대**
  - 지역 산업단지 주변 대학 · 대학원을 연계하여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 (지역 청년 자원 활용)
  - 지역 산업단지 주변 초등학교 등을 이용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 산단 주변 임대 기숙사 · 공동주택 지원
  - 지역 대학(원)과 연계한 산단 기술 교육: 온라인 교육 활성화, 교육 이수자에게 일자리 연결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 · 학 · 연 공동R&D 및 사업화 기능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
- **노후산업단지를 사람 · R&D · 산학융합 중심의 혁신 산단으로 전환하고, 산단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추진으로 산단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
- **지역산단 내 기업들에 대한 지역 · 산업 · 기업 · 제품 · 실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간 협업체제 구축**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추진(계약기간 연장, 사업자변경 등) 및 명절 · 연휴 등 교통정체 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추진**
-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로 단계적 전환하여 국가성장 기반으로 구축**
-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졸음쉼터 확충, 빌리지존 확대, '제로' 포트홀 추진 등으로 사고 없는 안전 고속도로 추진**
- **친환경차 통행료를 경차수준으로 할인**
-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 **이용률이 낮은 동해선, 광주 · 대구선 무료화 시범 추진**
- **동계올림픽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
비전 Ⅱ-1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8 철도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 녹색교통인 철도의 비중 확대, 공공성 강화하여 국민부담 경감 추진
- R&D 및 설비투자 확대로 시속 600km대, 세계 3위권 고속철 기술 및 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
-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 추진하고 단계적 확대 실시
- 장기적으로 한반도 X자형,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실행 노력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조기 가입 추진,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한-러, 한-중 협력 강화
- 한중페리연결사업 적극 추진

살기 좋은 농산어촌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4.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9.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10.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향상하겠습니다

12.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4.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살기 좋은 농산어촌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 **농지법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 · 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비전 Ⅱ-1

살기 좋은 농산어촌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타),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전기 적용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살기 좋은 농산어촌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 · 귀농인 · 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

비전 Ⅱ-1

살기 좋은 농산어촌

4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 · 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 농어촌 보육 · 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살기 좋은 농산어촌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 · 교육 · 휴가 · 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 지원
-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 · 개발 강화
-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살기 좋은 농산어촌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 활성화
-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살기 좋은 농산어촌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운영 지원
-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

비전 Ⅱ-1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살기 좋은 농산어촌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 수종갱신(2~3만ha), 임도밀도(3~6m/ha)를 확대하여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
- 목재생산 · 가공을 연계한 목재 산업단지 조성 및 목조건축 지원 실시
- 산림탄소경영 및 거래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0% 상쇄 실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청년일자리 개발
-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 조성

-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 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녹색복지 증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숲 체험 시설 확대 및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확대

산촌을 은퇴자 · 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 산촌특구를 지정하여 산촌 재개발 및 귀촌인을 위한 주택 분양 · 임대
- 산촌특구 주변 국유림을 귀촌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 공간으로 개방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임업분야도 직불제, 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 · 어업과의 차별을 해소
-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산지은행제도 도입

살기 좋은 농산어촌

9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가스 · 석유 등의 안정적 ·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도서지역 전용 화물선 보급 등 확보 지원
- 가스 등의 운송 가능한 위험물운송 적합선박의 건조 지원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어업 작업 중 비 · 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및 작업 기자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 쉼터 확대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지자체 별로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 추진(現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지정 · 운영 중)

살기 좋은 농산어촌

10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안도시의 유휴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치 도모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정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

+

비전 Ⅱ-1

살기 좋은 농산어촌

11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향상하겠습니다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全 도서로 확대
- 어업환경 보전,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참여 유도로 ‘휴어직불제’ 도입
  - 산란기 치어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르는 어가의 최소 소득보전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추진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일자리 · 성장)

살기 좋은 농산어촌

12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정 기준 증여세 감면 추진

살기 좋은 농산어촌

13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촉진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수출지원센터) 확대

- 우리 수산물 해외 마케팅 지역 다각화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위해 수산식품개발 지원 확대

- 안전한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소비시장 추세를 반영한 상품 개발(수산물 요리상품 등)
- 수산식품의 생산 · 가공 공정 표준화, 품질 · 위생관리,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

- 생산 · 가공 · 소비 · 물류, R&D 등 주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조성계획
- 효자 수출 품목인 김산업 활성화 지원

살기 좋은 농산어촌

14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겠습니다

폐어구 수거 확대와 철저한 어구관리로 어족 자원 서식환경 개선

- 연근해에 방치된 어구 등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 확대
- 어구생산업 등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도입으로 폐어구 수거 · 이송 의무 및 유실량 분석 등 어구관리체계 구축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추진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한 감척 활성화 추진

- 감척단가 현실화로 감척 활성화 및 실직어선원 구직 지원 추진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자발적 휴어 등 자율관리어업 기반 확대

자원회복 절실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명태, 쥐치, 낙지 등 회복대상 어종의 산란 · 서식지를 보호수면으로 관리 · 조성하고, 인공종묘 생산 · 방류를 통해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추진하며 연구를 지속하여 전문 생산시설을 확충

해조류 이식, 종묘 방류를 통해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확대

- 갯녹음 발생해역의 바다숲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바다목장을 확대

02-2

VISION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

약속

7. 출산 ·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8. 민생 · 복지 · 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약속 7

출산·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

왜 출산 · 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인가?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력 소멸,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 · 재생산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는 결혼 기피 및 출산 기피 현상의 결과로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래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혼 부부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의 주요 원인은 자녀 양육 · 교육 비용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자리 문제 등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 · 교육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이후 2060년 40.1%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은 약화되어 노후대비를 위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비전 Ⅱ-2

- 노후대비의 근간은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연금액이 적정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명목으로 연금을 삭감하여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분 중 4분이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2분 중 1분이 빈곤층일 정도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큽니다.

-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나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가 과도하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파산' 현상이 보여주듯이, 노후 생활비 절감 시책이 미비하면 고령사회의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후에 지출하는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후파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 고령화 대책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2.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불안을 불식시키겠습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 집중 인구감소 지역 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 등 지자체의 이주민 정착 및 소득 · 서비스 지원 사업 장려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 좋은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 동일 처우 적용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비정규직 OECD수준으로 절반 감축
-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자녀 양육 · 교육 비용 부담 경감
  -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육아휴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 ※ 현행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둘째아 이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소득 대체율 80%, 상한 200만원
      -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현재 연간 90일(최소 30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제 사용
    - 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임신 · 출산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공공 난임센터 · 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간 지급

저출산 · 고령화 대책

2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하여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시키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등 지원 확대

노후파산 예방

-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 · 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절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 노인부부(단독세대)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
-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 · 복지 · 돌봄 ·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 치료 ·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 · 주야간 보호시설 등 확충
  -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 · 간호사 · 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수준 공급.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포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경제참여 지원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 으로부터 보호

-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문화복지 확대
  - 경로당을 여가 · 건강관리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로 개발
  -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 공간 확대
  - 고령친화적 실버관광 위한 상품개발 지원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화로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 기금운용의 견제와 균형장치 마련
- 기금 운용의사 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과 자산구성의 세부적 공시 강화

약속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왜 민생 · 복지 · 교육 강국 대한민국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소득보장입니다. 그러나 소득보장의 미비로 근래 아동, 미취업 청년, 노인 등이 심각한 생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여전히 낮고(14년 63%, 10여년간 60% 초반대)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한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높아 서민들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쓴 가구가 280만, 소득의 40% 이상을 쓴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도 35만 가구에 달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월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일상화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에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2015년 현재 총주택량의 약 6%으로서 OECD평균인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한국 성 평등순위는 144개 조사대상국 중 116위, 2010년 이래 지속적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이 심각하여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및 가정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비전 Ⅱ-2

-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7.7%에 불과하며,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의 59.8%('15)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 복지가 여전히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가구 월 평균지출 330만원 중 교통비가 30만 8천원으로서 교통비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2016년 현재 18.5%에 불과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데이터통신비용 역시 일반 가정은 물론 창업자에게 큰 부담 요인입니다.

-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었지만 명절과 어린이날 등 일부 공휴일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 정유라 특혜 입학에서 보듯이 교육에서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 등이 여전하며, 공교육 불신, 과다한 사교육비, 대학 서열화, 학력 · 학벌주의, 지역교육 붕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4.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5.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 · 확충

- 아동 및 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득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인구집단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
  - 미취업 청년(청년 NEET족 포함, 만 18~34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의 실업부조금 지원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실업(폐업)시 실업부조 지원 단계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자활근로 종류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하여 빈곤층에게 중산층 재진입 기회 제공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 내역〉

제도명	대상	급여액	비고
아동수당	0~5세아부터 단계적 확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용 제한)
청년구직 촉진수당	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 지급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증빙시 지급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연동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 골목상권 · 전통시장 전용화폐 지급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현 제도와 지급대상 동일	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부가급여 현실화 ※현재 기본급여 월 20만원, 부가급여 장애종류에 따라 월 2~8만원	기본급여 : 장애로 인해 상실 내지 감소된 소득 보전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보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현 제도와 지급대상 동일	월 30만원으로 인상 ('18 ~ '20 25만원, '21부터 30만원)	현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폐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선 및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재설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정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비전 Ⅱ-2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2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 소액 · 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

비전 Ⅱ-2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
-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달성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환자안전 강화

-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 확대 지원
-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치과 · 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 생애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

비전 Ⅱ-2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4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

초 · 중 · 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5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여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
-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공공 · 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 추진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
-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하고,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 교육단계부터의 국가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 강화
-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 · 회송체계 강화

-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뢰 · 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

+

비전 Ⅱ-2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 대한 환수 · 몰수 · 형사처벌 적용 강화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 강화

- 동네 병 · 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감면 및 야간 ·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세티브제도 도입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 추진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
-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육 · 장기요양 · 치매 · 장애재활 ·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 시설의 매입 및 장기 임대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
-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극 투자 유도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
- 공단은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역할 담당

민간 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상향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

- 사례발굴 및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복지 인력 확충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

- 담배세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 · 학생 · 교직원 · 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

주거문제 해소

1.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17만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1인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5.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 세입자들의 전월세부담과 이사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1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공공이 직접 관리 ·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임기말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 달성
-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

+

비전 Ⅱ-2

주거문제 해소

2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 :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 도심 내 공공용지, 재생사업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신혼부부 중 위 프로그램(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평형 선택권을 보장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주거문제 해소

3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1인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공급 : 서울 및 5대 도시에서 20만실 확보**
-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수도권에서 3만명)
-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

+

비전 Ⅱ-2

주거문제 해소

4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 현재 약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
-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공공임대 공급 · 주거급여 외의 응급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및 지원
-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서'를 설치
- 적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주거문제 해소

5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여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개발 및 재개발사업 시 도시계획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

비전 Ⅱ-2

- 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되, 인센티브, 예산 및 기금 지원 도시계획 특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모델 개발
-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너지 빈곤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주거문제 해소

6 세입자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시 재산세 · 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 · 확산**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부모 · 조손가족 지원 강화

-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 보강
-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양육부 · 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마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2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경비에 준하여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60%미만) 대상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월 10만원, 연350만원)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인권보호 및 지원 확대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 기능 다양화, 의료급여 지급 등 지원 확대
- 자살위험, 보호관찰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찾아가는 전문상담가) 프로그램 확대

+

비전 Ⅱ-2

취약 · 위기가족 지원 확대

- 취약 · 위기가족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 및 지역 편재성 등에 대한 현황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사업규모 설정 등 취약 · 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비전 Ⅱ-2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지자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 수련시설에 대한 충실한 지도 · 감독 및 청소년정책 업무 내실화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

- 탈시설 아동의 소득, 주거, 교육 지원 확대 추진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 ·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근로지원인 · 보조공학 · 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A값의 10% → 15%)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 추진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인력 기준 등 서비스질 관리 강화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 · 돌봄 ·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

비전 Ⅱ-2

장애인교육 · 문화권 확대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 수준)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 장애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웹 접근권 및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성인지적 · 장애인지적 관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 임신 · 출산 및 양육 등 공공돌봄 서비스 우선지원과 확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추진
- 뉴스 · 선거관련 방송 및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의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추진
-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 환경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장애인 공간 확대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 ·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인부모 무료 상담 지원, 양육정보 시스템 구축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 ‘장발장 은행 제도’ 시행 · 확산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 확산

-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 마련
- 기본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의 방식을 취하나 재능 기부를 통한 상환제 등 다양한 상환 방식 도입 검토

회생신청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 곤란을 겪는 국민의 경우, 일정한 자격 심사를 통해 회생신청 비용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제도 마련

생활비 절감



1. **일, 주, 월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입**으로 **교통비 30%를 절감**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겠습니다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3.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생활비 절감

1 일, 주, 월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를 절감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겠습니다

-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 수준 절감
- 이용횟수와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정액교통카드 발행
- 일, 주, 월, 48시간, 72시간, 가족단위, 커플용티켓, 외국인방문자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액제 Pass 발행
- 월 단위 패스 이용객의 경우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연계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 단계적 확대. 주차(생활)비 절감

+

비전 Ⅱ-2

생활비 절감

2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 대학 입학금 폐지
  - 반값등록금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무상교육기회 제공**
  -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국가근로장학생, 평생교육 강사 등을 교사로 활용
-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무료 K-MOOC 강의 제공 및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생활비 절감

3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 · 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주거 클러스터 시범 건설

생활비 절감

4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 주파수 할당 신청 때 제시하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등 항목 추가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 때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때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 대역 회수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 요금 절감 효과가 큰 결합서비스를 장려하고, 다양한 상품이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
-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가운데 잔여분은 익월도 이월 또는 다른 디바이스 공유등 재활용 활성화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 보장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

- 공공장소에 한해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
-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 아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

한 · 중 · 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 한 · 중 · 일 3국 간 경제적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공발전과 평화를 위해 매우 긴요. 3국 간 서로 국내와 동일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 이를 통해 한 · 중 · 일 3국 간 더 활발한 경제, 문화적 교류

국민 휴식권 보장



1.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1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습니다

국민의 휴가권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

대체 공휴일제 확대

-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 실시
-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검토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을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 특히, 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한 배려

+
비전 Ⅱ-2

국민 휴식권 보장

2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 금지

-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 근로시간외 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장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4. **고교 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든든한 울타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7.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8.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9.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습니다
11.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 하겠습니다
12.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13. 소통 · 협력 ·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비전 Ⅱ-2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

-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저소득층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 교육프로그램 · 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를 통해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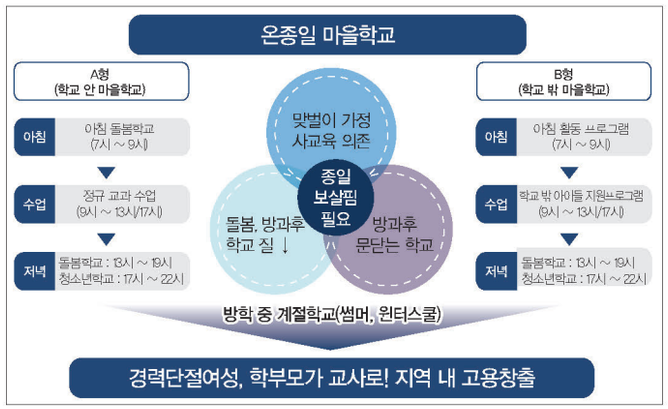
■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마을학교를 도입해 아동 · 청소년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

- 학교 안 마을학교(A형)와 학교 밖 마을학교(B형) 구축
  - · 아침 돌봄학교 설립
  - · 방학 계절학교(썸머스쿨, 윈터스쿨)도 운영하는 지역거점기관 설립
- 학교밖 마을학교(B형)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원
- 마을학교장을 임명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 꿈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생에 대해 의무조사 실시

〈온종일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3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 · 중 · 고 필수 교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 교과목 수 축소
- 교육과정 난이도 및 분량 적정화
-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수방법과 교육평가 혁신을 위한 학교 교사 연수 전폭적 지원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추진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자유학기제 확대

-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 · 절대평가
- 현행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기제 확대
- 자유학기제 기간중 진로 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 지원
-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진로 찾기와 진로 프로그램 코칭
- 중고등학교 휴학제 허용

비전 Ⅱ-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초 · 중 · 고, 문예체 교육 강화

- 초 · 중 · 고 교과 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의 문예체 교육 강화

+

비전 Ⅱ-2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4 고교 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

진로 ·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
-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 고교학점제는 유형별 · 단계별로 확대
  - 1단계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 2단계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 3단계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확대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 없는 학교 추진

- 일반고–특성화고교–대안학교간 학점 연계로 학교간 이동 허용
- 일반고 학생의 특성화고 전공인증제 도입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5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꼼꼼히 챙겨 공교육 책임과 만족도 향상
- 수업 이해를 못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기초학습력 제고
- 학부모–교사–학생의 면담 의무화,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 학교에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및 학습코칭팀 구성

1수업 2교사제

- 학생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 배치
-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과정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 활용
- 초중고 교사 확대

+

비전 Ⅱ-2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6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든든한 울타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

- 교사양성기관과 교직 이수 기관의 교육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정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확대

교사의 수업기획력 · 수업 집중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학교 공문 처리 전담팀 및 행정 지원 인력 확대
- 교과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학교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증원

- 기간제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범대와 교직이수학생에게 교직 기회 확대
-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 학교건물 안전평가제도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 대책 마련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추진

분필칠판, 노후 책걸상 및 화장실 개선

찜통 · 냉골 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교실 환경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 · 화상경륜 · 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

비전 Ⅱ-2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8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대학입시 단순화

-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

- 대학입시 부정 · 비리 감시 강화
- 대학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

대입 전형 절차 간소화

-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강화
- 대학 입학 전형수 축소 및 대입전형 명칭의 표준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도록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
-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 예측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 추진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9 고졸 우대를 통해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점제 및 운영 유연화

- 특성화고 3년 재학연한 폐지 및 학점제를 도입해 학교안과 학교밖의 교육 ·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연계 강화
- 특성화고 학점제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도 특성화고 전학이 용이하도록 유연화

先교육훈련경험인정제 추진

-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시 先교육훈련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교육 · 훈련 비용을 줄이고 전문대 조기 졸업 기회 제공
- 학교 내, 학교 밖의 교육 훈련을 학점과 자격으로 전환
- 고등학교–대학 간, 대학 간, 대학–산업체 간 활용

+

비전 Ⅱ-2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공공기관 · 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 시 특기병으로 갈 수 있는 조치 마련
- 고졸기능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 전공 적합성이 높은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 산업체 실습 현장 관리 강화
- 노동 인권 교육 강화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 SW 교육확대 및 스마트 학교환경 구축
- STEAM(창의 · 융합교육) 강화
- 향후 5년 동안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1만명 확보

미래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직업교육 강화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 정부주도의 기획, 교육과 산학협력, 재정지원 확대
- 특성화고 실정에 맞게 상담 · 진로교사, 교과 · 실습 지원 교사 추가 배치

전문대학 질 제고

-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K-MOOC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적합 단기학위(한국형 Nano-Degree)운영

-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등 4차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핵심 강좌들을 묶어 교육과정을 개발
- 6개월~1년의 단기간에 특정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후 단기 학위 발급

+

비전 Ⅱ-2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1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 · 학벌차별 관행 철폐

학력과 학벌, 차별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을 확대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 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 확대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 · 한의과대 · 치과대 · 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 지방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 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 신 · 증설 확대
- 특수교사 법정 정원 단계적 확보
-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탈북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학력 · 심리 ·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12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국립대학간 선택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지원
-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 교육 · 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 · 교육중심 · 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의 평가 실시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민생 · 복지 · 교육)

13 소통 · 협력 ·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 평생 ·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실화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 이력제 추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이력제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 소통 · 협력을 통해 정책 파트너십 강화

03
VISION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10. 안전한 대한민국

- 지연 · 사회적 재해 · 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강국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활로를 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외교안보통일 환경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 한중관계 파탄, 한일관계 파국으로 대표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외교 · 안보 · 남북관계 모두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이 4차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널뛰기 외교로 외교관계를 망쳤습니다. 방산비리로 안보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주권 · 자결 원칙에 따라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 이기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불신의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쟁을 국제규범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국제 거버넌스의 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책임국방으로 유능한 안보를 실행하겠습니다.
국방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통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정예화할 것입니다. 투명한 무기획득체계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는 병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 Ⅲ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미 · 중 · 일 · 러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익을 위해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 협력외교, 국익우선의 주변 4국 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통상 외교를 적극화하고 공공외교를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를 포함해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바라보는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8천만 민족이 더불어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민주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국방



1.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2.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이 보답**하겠습니다

+

비전 Ⅲ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책임국방

1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통한 국방예산 효율화
-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효율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의 조기 전력화

- 한국 지형에 더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KAMD)의 조기개발 및 배치
- Kill-Chain의 실현 가능성과 완벽성을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 증강, 적 지휘부 마비전력, 전자기탄(EMP) 증강 등을 추진
- 북핵 ·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칭)」 설치 검토

책임국방

2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
-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

+

비전 Ⅲ

3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개혁 2.0〉 추진

-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 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 후속개혁안 확정
-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 · 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재선정
-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 작성을 통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추진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증원

국방의 문민화 적극 추진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주요 보직에 민간인 보임
-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임기 내 생산목표 30조원 달성

수입에 의존해 온 각종 첨단무기(최근 5년간 24조원)의 국내 개발을 적극 검토, 수입대체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 획득 기회로 활용

국방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 산업 활성화

경쟁제도 정착으로 산업 · 국방 · 예산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 · 군융합 촉진 및 방산 육성

+
비전 Ⅲ

책임국방

5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보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 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와 지원 확대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군 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 방지
-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 향상

여군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 · 육아 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 강화
- 군 내 여군 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 선발은 물론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 육 · 해 · 공군 인사, 복지 · 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 관련 기구 강화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책임국방

6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이 보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 복지 · 안장시설 확충

독립,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 강화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소방관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 현실화와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정책 추진

국익우선 협력외교



1. 5천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겠습니다

5.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1 5천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외교 시스템을 구축

-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 확대 및 SNS 등 다양한 쌍방향 네트워크 활용
- 주재 대사관, 영사관과 교포,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국익증진에 기여

- 양자 · 다자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의원외교와 행정부의 외교활동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해외활동이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인력 전문화와 인사관리의 신뢰 확보

- 주도적이고 책임성 있게 외교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역량강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해외주재 외교관의 업무태만과 일탈을 방지하고 국민과 국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 관리감독 강화

국익우선 협력외교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한미동맹관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 확대
- 확장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한미 2+2 외교 · 국방장관 전략대화의 상시 운영 제도화
- 동맹 호혜성 인식 제고를 통한 한 · 미간 현안 해결
-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한중관계: 신뢰를 회복하여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

- 한중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 사드보복 철회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 추진

- 12.28 위안부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
-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 협력으로 실용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한러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남 · 북 · 러 협력 사업의 전개
-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과 번영 공간 확대

- 한 · 중 · 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

+

비전 Ⅲ

국익우선 협력외교

3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 · 중 · 일 FTA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한 · 중 · 일 3국의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
- 북한의 WTO 가입 등을 통한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 지원
-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B),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연계를 통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 추진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추진

-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를 일본,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진출 시장으로 적극 개발
- 호주, 싱가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통상 선진국가 클럽(일명 '서울클럽') 구성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
-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 통상외교 전문성, 국제 통상 분쟁 대응 역량을 적극 강화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국익우선 협력외교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 외교부, 문화부, 위원회 등이 별도로 진행해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외교 수행기관 간 전략적 역할 분담과 상승효과 도모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

-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원조사업과 국내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확대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
-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

+
비전 Ⅲ

국익우선 협력외교

5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 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거주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 개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체계 강화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
-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 조직 확대 추진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재외동포 사회의 교류와 경제 역량 강화
-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내실화

평화통일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 **남북 사회 · 문화 ·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비전 Ⅲ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통일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단계적 ·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 추진
-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평화통일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동해권 에너지 · 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

- 금강산, 원산 · 단천, 청진 ·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서해권 산업 · 물류 · 교통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 남포,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
-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

동해 · DMZ 환경 · 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
- DMZ를 생태 ·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비전 Ⅲ

평화통일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
-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 실현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개선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통일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
- 7 · 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 15공동선언, 10 · 4정상선언을 존중하며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 도출
-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
-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시키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
- 여 · 야 · 정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및 통일공감 확산
  - 안정적 대북 ·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센터'를 광역 지자체별 설치 추진
  - 국 · 내외 한반도 평화 · 통일 관련 통일 차세대 전문가 양성

+
비전 Ⅲ

평화통일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당국에게 정책 및 제도 변화 촉구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사회권 보호 · 증진
-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추진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 약 6만명 전원에 대해 전체 상봉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과 교환
-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 2면회소 건립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포로 · 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 마련

- 국군포로 · 납북자 고령화를 고려하여 유해 송환 등 사후정책 병행 추진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통일

6 남북 사회 · 문화 ·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
-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 · 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

-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
- '통일경제 특구법' 제정 추진

+
비전 Ⅲ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 10 안전한 대한민국

왜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 전체를 성찰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무너져 꽃도 피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되었으며, 국민은 절망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AI까지 모든 재해 · 재난 위기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유해물질의 유출가능성 있는 제품이 위해성 평가 없이 관리되는 등 인재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맞는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각종 대형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관들이 사재를 털어 장갑을 구매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독립시키고 119응급구조 서비스도 선진화시킬 것입니다.

-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독도 · 이어도 등에 대한 주변국의 도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입니다. 해양경찰 조직을 개편하여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자연·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 ·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4.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6. **축산 방역 강화**로 AI · 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7.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0.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11.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 ·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 너울성 파도 등 연안이상 현상의 발생원인 규명 및 재해 저감을 위한 예측 기술 개발(R&D), 해역별 예 · 경보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고도화

+

비전 Ⅲ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 국가위기관리 메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역량 강화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 재난대응 지휘 · 보고체계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구조 구축
- 시군구의 재정, 인력 및 업무능력에 대한 현실적 한계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국민안전기본권 ·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독립하여 현장 대응체계 강화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 국가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가슴 속 상처 치유를 위한 센터의 설치와 운영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 및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에 취약계층 시설 설치 제한

재난대비 시스템 강화

-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확립
- 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시설 보강 강화
- 재난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방재 · 안전 산업 육성

- 재난 안전 비상 통신 시스템, 원자력 해체 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 설계, 사물 인터넷 기반 방재 기술 등 방재 · 안전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

비전 Ⅲ

4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 기업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추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제거

-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
- 식품표시제 도입,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

- 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로 안전교사화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싱크홀, 포트홀 등을 야기하는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5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항실적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여 도서민에게 교통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도입

선박안전 및 선원관리 통합 · 운영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

낙도의 여객선 기항지 항 · 포구시설 개선사업 확대로 안전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

- 소규모 항포구 161개소(기 완료 27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지역 · 항로별 운항여건 및 선정에 따라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기항지 개선

+

비전 Ⅲ

6 축산 방역 강화로 AI · 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 사전 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 정비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및 소비유통 지원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7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시키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설치 추진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 효과적 감염병 대응능력 갖출 수 있도록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 부여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

비전 Ⅲ

9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3배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의 면책조항으로 영업 비밀을 남용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국민들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10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
  - 국내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

+
비전 Ⅲ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1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 운영 · 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 등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 강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생활안전 강화



1.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 강력한 지도 · 단속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5.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8.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비전 Ⅲ

생활안전 강화

1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한 예방 치안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

- 경찰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의 책무를 가지고 위험지역 환경개선, 범죄예방에 참여토록 함

■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생치안정책 수립**

- 학교보안관, 배움터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제도 및 운영 개선
- 범칙금 및 과태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검토

■ **과학기술과 치안 R&D를 활용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 개발**

- 우리 실정에 맞는 치안과학기술 R&D 개발 등 치안과학 투자 확대

■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

■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인력 신규 충원 확대**

■ **경찰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치 등 사기진작 대책 추진**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생활안전 강화

2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

■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충원 및 근속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대책 추진**

■ **심리건강관리센터(트라우마 센터), 소방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해 소방관 전문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

■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선제적 화재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경보기 등 소방시설 보급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확충하고 체계적 · 선제적인 예방활동 및 안전점검 강화
-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 대피로 가로막는 행위 처벌 강화

■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급망을 구축하여 119 응급구조서비스 선진화**

-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지역(소방 지역대)에 119 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도서, 농어촌지역 등 응급의료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헬기 배치 확대

+

비전 Ⅲ

생활안전 강화

3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 해양경찰의 수사 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주권 수호 실현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운용 인력, 안전센터 개선 인력, 상황센터와 VTS 개선 인력, 구조인력 보강
-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생활안전 강화

4 강력한 지도 · 단속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법어업 공동대응 능력 강화

- 중국어선 불법조업 · 폭력저항 실황을 중국 측과 실시간 공유 · 공동 대응하여 중국 정부와의 공조단속 등 체계 강화
- EEZ 입어 중국어선 종합관리, 불법 조업정보, 나포어선 허가유무, 몰수 대상 여부 확인 등 IUU어업 감시 · 감독 및 통제 추진
- 대용량 채증자료를 초고속으로 공유가능하도록 자가전용위성망을 확충하고, 동 시스템의 24시간 운영 추진

어업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조업 신속 대응

합법적 입어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 부착 추진

- 한 · 중 협의를 통해 불법 어선 식별관리시스템 구축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 촉구

+
비전 Ⅲ

생활안전 강화

5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유통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원산지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인력 확충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추진(최종 소매단계의 위생 · 안전 보증)
- 대중성 어종 및 유통경로 불투명 어종에 대해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고효율 · 친환경 양식장 조성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자연재해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양식이 가능한 양식장 조성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확대

-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및 기존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운송수단(냉장 · 냉동탑차 등) 지원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생활안전 강화

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들의 학대 (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시설장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가정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제도화
- 아동학대 발생 시 조사 및 문제 해결 지원

학대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 · 치료를 위한 인프라 · 인력 확충

- 아동학대 개입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피해아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 ·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동 쉼터 및 전문치료 인력 확충

생활안전 강화

7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 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검사 통과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 · 로컬푸드 · 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의 소득 향상 추진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 식품의 홍보 확산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생활안전 강화

8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로 안전사각 해소

- 인체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 · 수시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 사용금지 성분 지정 등 인체적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 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

-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

생활안전 강화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보시스템 구축

- 내진설계 · 건축 공공 지원, 홍수용 저수 · 산림 육성, 가뭄용 연결 수로 확충, 싱크홀 방지
- 한반도 통합국토공간정보 구축
- 지진에 강한 안심국토 실현 및 지진재난 대응역량 강화
- IoT기술 기반 지능형 건물 · 시설물 모니터링 대응체계 마련

4대 교통사고 줄이기

-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 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 · 통학생 보호 특별교통대책 수립
- 불법자동차 · 오토바이 통합관리 강화, 차 없는 도로 조성사업 지원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 추구

- 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지하안전 등) 등 대응 프로그램 구축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 빈곤 등 생활불편 해소

- 방사능, 미세먼지 등 주요 위해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04
VISION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약속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 · 예술 · 체육

– 언론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약속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인가?

-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는 자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은 물론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에너지와 환경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틀을 규정한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해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수요관리가 미흡하여 에너지 과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낭비문화가 만연한 상황을 극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4대강 대형보로 인해 녹조발생이 심화되면서 독성 남조류가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낙동강 등 4대강 취수원 식수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수문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65%가 산림입니다. 산림 자원의 관리를 통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정상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비전 Ⅳ

-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황사, 미세먼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성별격차지수가 144개국 중 116위(2016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평등 사회조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성주류화 기반구축과 함께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어야합니다. 일 · 생활균형, 젠더폭력예방, 젠더복지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한 대한민국



1.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일 · 가족 ·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3.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5.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

비전 Ⅳ

성평등한 대한민국

1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 실효성 제고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시행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추진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 정규 교육과정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2 **일 · 가족 ·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소득대체율 40% → 80% 상향, 상한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
-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현재 연간 90일(최소 30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제 사용
- 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

비전 Ⅳ

성평등한 대한민국

3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 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 성별임금격차 지표관리와 성별고용영향평가 도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 이상 청년 고용의무화 및 여성청년할당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 새일센터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매칭과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지원까지 취업알선책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공동주택내 설치, 민관공동연대, 민간 · 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 및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

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 완전해소

아동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보미사업 이용자 세액공제

돌봄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시간제보육 시설 확대
- 공공시설과 영유아 동반 이용 시설의 화장실 및 수유실 개선

성평등한 대한민국

5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 현행법령은 젠더폭력 문제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
-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체계 마련 필요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아동, 장애여성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가중 처벌
- 특수성에 맞는 범죄 피해자지원 마련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문제 정책 방향 전환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이혼 진행 중 피해자 및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 형법 및 각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재정비
- '피해자(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마련
- 성폭력 무고 수사지침 및 절차 마련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대책의 획기적 전환

-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및 탈성매매 지원강화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 운영, 상담 · 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몰래카메라 촬영과 촬영물 유포협박, 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관련 범죄 국 · 내외 법적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법률망 구축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를 위한 법 마련

폭력예방교육(성희롱 · 성매매 · 성교육 및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전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목표로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및 이행 관리 · 감독 강화, 교육참가자의 평가를 교육내용에 재반영하는 효과적 평가 환류시스템 마련

성평등한 대한민국

6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원 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 성폭력 피해자 중 임신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 재정비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성평등한 대한민국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 굴욕적인 12.28 한 · 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일(8월 14일)을 기림일 지정 및 조성물 보호

■ 역사적 자료 수집 · 보존 · 관리 및 조사 · 연구 체계적 수행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습니다

2.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친환경 · 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5.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6.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가뭄 · 폭염 · 미세먼지 등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습니다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

비전 Ⅳ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소규모 신 · 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강화

■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조정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4차산업 적용 에너지사용 효율화 기술개발 추진

-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 실시간 측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 최적화 실현

■ 건축물의 단열, 각종 에너지 제품의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1등급(40% 이상)에 맞도록 하고 기존 노후 빌딩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을 경우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
- 소형주택 신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으로 건축한 집)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단계적 추진

+

비전 Ⅳ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3 친환경 · 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반영 수립하여 저탄소 · 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

-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 · 확대의 지속적 추진

■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 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정착 및 발굴 육성**

- 에너지신산업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 마련 추진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명성 · 책임성 확보**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성 구조로 전환**

■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4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

+
비전 Ⅳ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5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리해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소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평가비용 공탁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
- 환경성과 함께 경제성,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보완하고 허위 · 거짓 영향평가확인시 재평가 제도 도입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마련 추진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6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실시

-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 개방과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 결정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수질 · 수량 ·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

비전 Ⅳ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7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가뭄·폭염·미세먼지 등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진 관측망을 대폭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서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대폭 단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실현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8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 동물병원의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생활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 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 지자체별 (가칭)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로 제공
-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프로그램을 지원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정비
- 유기동물 재입양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
- 반려동물등록제 확대(고양이까지 확대 후 단계적 추가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 지자체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사업 지원
-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캣맘 등) 협력 사업으로 추진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및 지원 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시 축사시설비 지원
-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추진

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 '17년 이후 시행되는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약속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왜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인가?

국민 누구나 창조성의 원천으로써 문화 ·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블랙리스트'를 척결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 · 참여 · 창조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되도록 할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단기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과 작품발표 공간을 확보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여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운동 참여 비율과 생활체육 참여를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문화인프라와 통합문화 이용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 구축 및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의 분산 정책을 적극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관광 콘텐츠,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문화 · 예술 · 체육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6.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표준계약서 의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긴급생활자금, 상해 · 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비전 Ⅳ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문화 · 체육 · 관광 통합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 문화 · 체육 · 관광 지출비의 조세 감면 제도 도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딸로)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
-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 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 등)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연습 · 발표공간과 예술강사 지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출판 작품들의 해외 보급 사업의 확대

문화 · 예술 · 체육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담합 등 금지
  -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확대
-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 예술과학기술 융합플랫폼 확대 및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비전 Ⅳ

문화 · 예술 · 체육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고도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 개인, 중소사업체 등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기반 강화
-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 근 · 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 지원
-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 추진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문화 · 예술 · 체육

6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 · 지하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 지원
-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

비전 Ⅳ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문화 · 예술 · 체육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

-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추진
-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확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
-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
-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 이수
-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학교체육진흥회 설치, 학생체육대회 분리 개최
- 전문체육 · 생활체육 · 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
비전 Ⅳ

문화 · 예술 · 체육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시행)
-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에 인센티브 부여 등 무장애(장벽 없는) 관광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편 제고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입 확대
-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국민관광신탁제 도입

언론



1.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하겠습니다
3.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4.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언론

1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종편 · 보도전문채널 ·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 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권 보호
-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추진
-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
-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 · 징수 · 배분 등 관리 · 감독 강화

언론

2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 지원 확대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의 콘텐츠 개발 · 유통 지원에 특화

언론

3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사업 · 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 추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언론

4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 방송 활성화 추진
-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 확충 추진
-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매체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 조성

- 글로벌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供進化) · 유효경쟁 체제 구축
-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시장 내 상생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 정부 ·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민간기업의 홍보 등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거래 근절 및 협찬광고의 투명성 확보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1. '나라를 나라답게'위한 소요재원 규모 :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0조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4.2조원**

· 공무원 17.4만명 /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34만명 /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30만명

■ **저출산 ·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 18.7조원**

· 아동수당 / 육아휴직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 확충 /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노인일자리 수 및 수당 2배 / 청년 · 신혼부부 우선배정 등 공공임대 확대 공급 / 도시재생뉴딜 / 청년구직촉진수당 / 65세이상 실업급여 등

■ **교육비 지원 : 5.6조원**

·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현 / 등록금부담 경감 /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등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2.5조원**

· 중소기업 청년 3번째 추가고용 지원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 **국방 · 기타 : 4.6조원**

· 국방예산 증액 / 쌀생산조정제 / 발전차액지원제도 / 기후예측시스템 등

2. 재원조달 방안

1 재원조달의 원칙

·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

·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

· 세입기반 확대에 따라 박근혜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공약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나, 공약 이행 재원으로는 미포함

– 동 재원은 공약이행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비 매칭 부담 재원으로 우선 사용

2 재원조달방안

①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재정개혁 방안〉

■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4조원(5년간 92.0조원) 조달

– 방산비리 예산, 최순실 예산,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 권력 · 비리 예산 근절

–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

–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 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예산, 목표 달성률이 낮거나 성과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연례적 불용 예산, 소비성 · 중복성 · 선심성 예산 등 문제 예산 삭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출의 합리적 조정

– SOC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연평균 3조원(5년간 15조원) 조달

* '17년 기준 48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28.0조원

■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 조달

* '17년 기준 융자예산 규모: 29.3조원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연평균 22.4조원) 조달

〈 재정개혁 연차별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연평균	합계	'18	'19	'20	'21	'22
◇ 합계 ①+②+③	22.4	112.0	19.6	21.1	22.5	23.7	25.1
① 재정지출 절감	18.4	92.0	16.2	17.3	18.4	19.5	20.6
② 기금 여유재원 활용	3.0	15.0	2.9	3.0	3.1	3.0	3.0
③ 이차보전 전환	1.0	5.0	0.5	0.8	1.0	1.2	1.5

②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

〈'세입개혁' 방안〉

■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3조원(5년간 31.5조원) 조달

–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 · 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9조원(5년간 29.5조원) 확보

– 국세청의 세원 빅데이터(Big data)분석 확대 및 ICT 첨단 세정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5조원에 달하는 탈루세금 환수행정 노력 지속

– 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한 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개선

■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0조원(5년간 5.0조원) 조달

–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 관리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 등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세법개정, 세금탈루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5년간 66.0조원, 연평균 13.2조원 내외 확보

〈 세입개혁을 통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연평균	합계	'18	'19	'20	'21	'22
◇ 합 계 ①+②+③	13.2	66.0	8.0	15.5	13.7	14.3	14.5
① 세법개정	6.3	31.5	1.4	8.7	6.7	7.3	7.4
② 탈루 세금 과세강화	5.9	29.5	5.9	5.9	5.9	5.9	5.9
③ 세외수입 확대	1.0	5.0	0.7	0.9	1.1	1.1	1.2

❸ (종합) 재정개혁 ·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

■ '재정개혁'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총 178.0조원, 연평균 35.6조원의 추가 재원 조달

–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총재원의 63%), 연평균 22.4조원 조달

–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0조원(총재원의 37%), 연평균 13.2조원 조달

〈 재정 · 세입개혁 연차별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연평균	합계	'18	'19	'20	'21	'22
재정개혁	22.4	112.0	19.6	21.1	22.5	23.7	25.1
세입개혁	13.2	66.0	8.0	15.5	13.7	14.3	14.5
합 계	35.6	178.0	27.6	36.6	36.2	38.0	39.6

수혜계층별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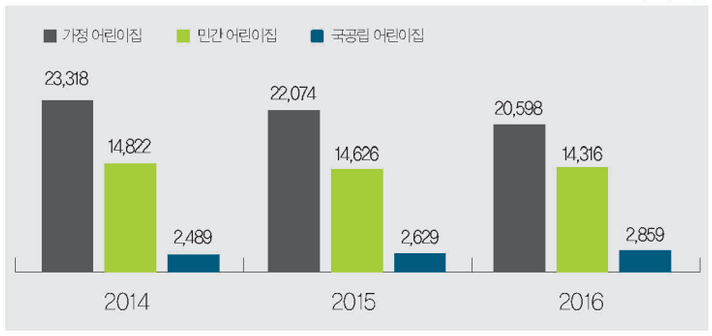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보육 · 교육 환경 개선으로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민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수)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아 · 아동의 행복,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1 유아 · 아동(어린이 공약)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온종일 완전 돌봄체계 구축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법제화 추진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
- 초 · 중 · 고생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지원

1 유아 · 아동(어린이 공약)

초 · 중 · 고, 문예체 교육 강화

- 초 · 중 · 고 교과 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유아 · 초등 문화유산 견학 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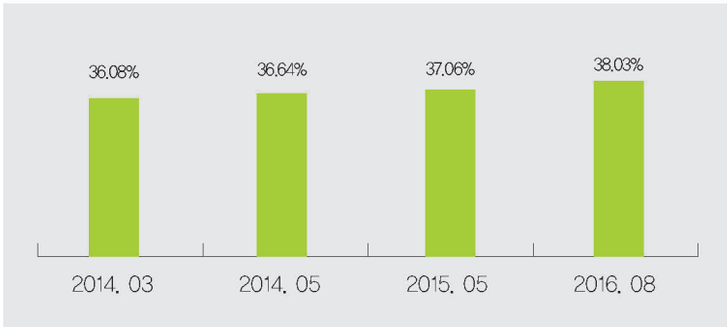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미래를 위해 길을 열겠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와 고졸 취업의 열악한 현실,

국가가 청소년의 웃음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고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청소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 청소년(중 · 고등학생)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 · 중 · 고 필수 교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 현행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기제 확대
- 자유학기제 기간 중 진로 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 지원
- 중고등학교 휴학제 허용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진로 ·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
-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대학입시 단순화

-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대입 전형 절차 간소화

-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강화
- 대학 입학 전형 수 축소 및 대입전형 명칭의 표준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경비에 준하여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60%미만) 대상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월 10만원~연350만원)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인권보호 및 지원 확대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대, 기능 다양화, 의료급여 지급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무선인터넷 요구제 도입 추진

2 청소년(중 · 고등학생)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공공기관 · 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시 특기병으로 갈 수 있는 조치 마련
- 고졸기능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 고졸자 선취업후진학 확대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 '알바존중법' 도입 : 3개월 계속 근로제공하는 청년알바(초단시간 계약 포함, 근무기간 90일 이상으로 지급 대상 완화) 등 실업급여 확대 적용 및 퇴직(금)급여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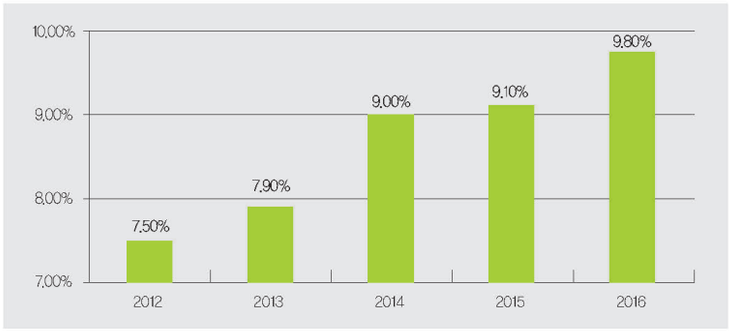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청년의 짐을 국가가 나누겠습니다!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부담 줄이고

불공정한 채용관행 개선하겠습니다.

연도별 청년 실업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활력과 사기충천 100%
당당하게 어깨를 편 청년,
대한민국의 동력입니다

3 대학생 · 청년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

청년(1인가구)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대학생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대학 밀집지역에 주거와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시범적 건설하여 주거/취업난 동시해결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대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청년창업자금 지원 확대

-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 창업자금 확대 지원
-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자랑스럽고 만족도 높은 군 복무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단축 · 급여 인상하고

전역과 연계한 자기개발 지원하겠습니다.

2017 군인 사병 계급별 월급 현황

(단위 : 원)



출처 :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군 장병의 높은 사기
자주국방의 초석입니다

4 군 장병



- **장병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한 연차적 인상**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 인상
- **현행,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에 따른 비용 지원**
  - 군 복무 기간 중 군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 실시
-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보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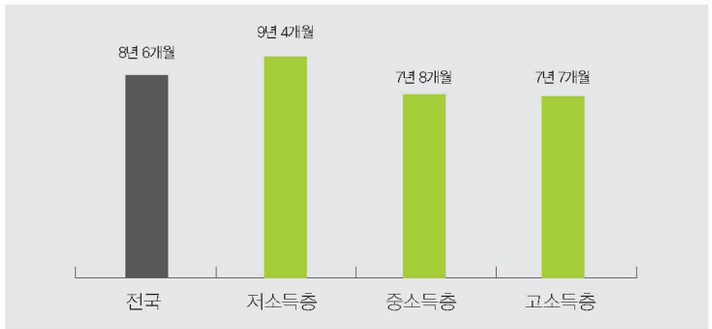
더 이상
헬조선은 없습니다!

신혼의 주거불안 해소하고

임신 · 출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내집마련 예상 소요기간

(2014)



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패널조사」

일 · 가정 양립과
출산장려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약속합니다

5 신혼부부 ·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
-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 평형 선택권 보장
- 신혼부부 대상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 신혼부부 중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게 2년간 한시적 '신혼부부 주거정착지원금' 지원

임신 · 출산 지원 대폭 확대

-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공공 난임센터 · 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 지급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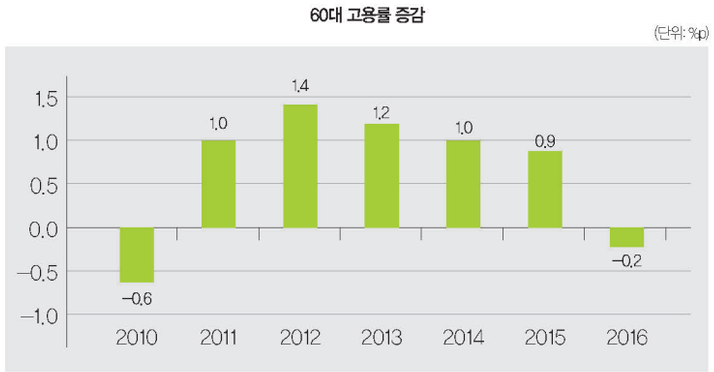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2배 인상
- '10 to 4 더불어 돌봄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칼 퇴근법' 제정 :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

절반의 인생,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직업훈련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과 교육혜택 확대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분석」



노후걱정 해소
신중년이 웃는 정책,
국가의 책임입니다

6 신(新)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

-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 · 강퇴방지법] 제정
- 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 도입
-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적용
-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
-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 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6 신(新)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

신중년,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등 지원, 창업 등 확대

-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 성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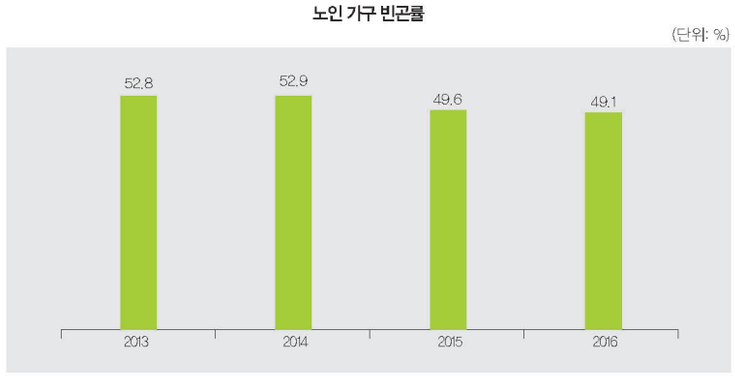
신중년, 자녀 걱정 · 부모 부양 걱정 부담 해소

-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로 자녀취업 걱정 해소
- 가족의 치매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모님과 가족 의료비 걱정 해소
- 가족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신중년 전업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가 · 휴식지원제도] 도입

노후가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인상하고 의료복지 강화, 여가 생활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통계청, 처분가능소득 빈곤률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
든든한 나라의 기본입니다

7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
- 일자리 수당 2020년까지 월 40만원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매년 13만호 이상 공급) 중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한(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지원 주택 확대

홀몸 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방지 '홀몸노인안심센서' 설치

의료비 절감 및 간호 · 간병서비스를 확대

-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절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 노인부부(단독세대)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 · 복지 · 돌봄 ·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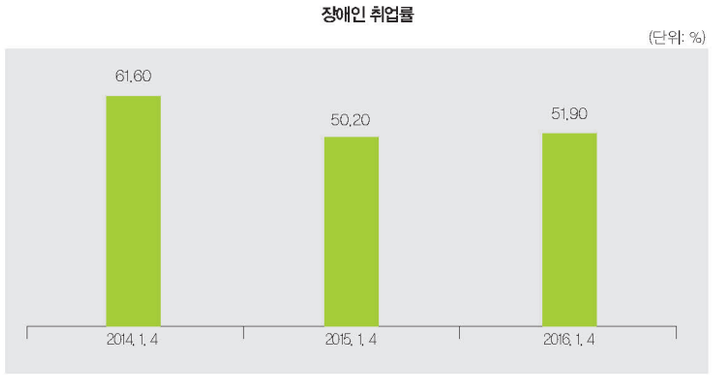
- 경로당을 여가 · 건강관리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 센터로 개발
-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 공간 확대
- 고령친화적 실버관광 위한 상품개발 지원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K-MOOC 강의 제공 및 학점 취득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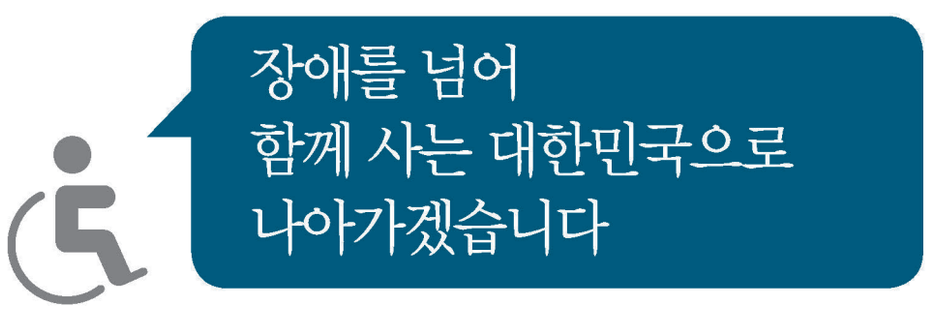
생활에 장애 없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의료 · 연금 지원 강화하고

안심 생활환경 조성, 교육과 문화복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8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 근로지원인 · 보조공학 · 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A값의 10% → 15%)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 추진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 추진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교육권 확대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 수준)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 장애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8 장애인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및 임대주택 확충
-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확대
- 중증장애인 전용 지원주거(supported housing)제도 제도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추진
- 뉴스 · 선거관련 방송 및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의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추진
-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 ·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거점별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 건립

-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 설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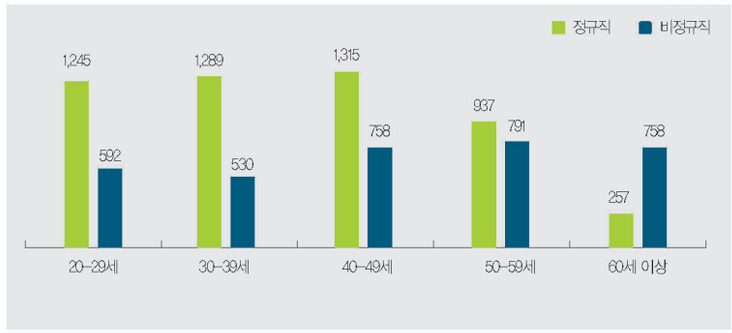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합니다!

여성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출산 · 육아환경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천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8)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 여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 성평등 임금 공시제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고용 사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새일센터'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매칭과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지원까지 취업 알선 책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마련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일 · 가족 · 생활의 균형 실현

-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노동시간단축 청구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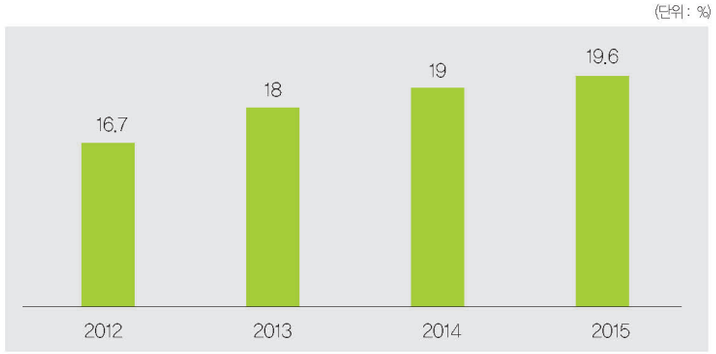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 건강 기본계획 마련 및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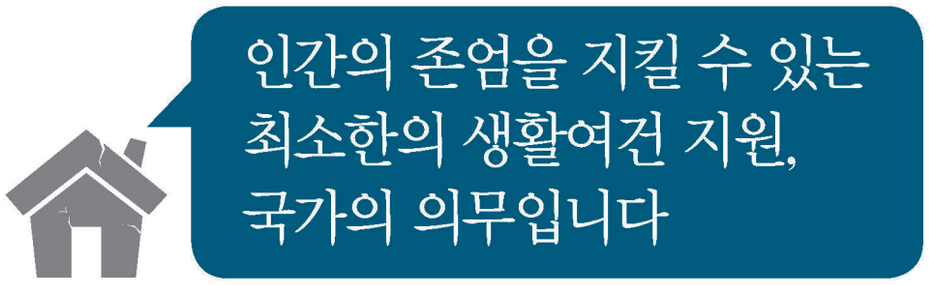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등

눈물을 닦아주고 자립을 돕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대출과 먹거리 지원, 교육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별 · 대상자별로 단계적 폐지 추진
- 생계, 의료 등 각 급여 선정기준선 및 최저보장수준 현실화

국민연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

- 저소득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 · 한의과대 · 치과대 · 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 및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계층 시설 설치 제한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10 저소득층

-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 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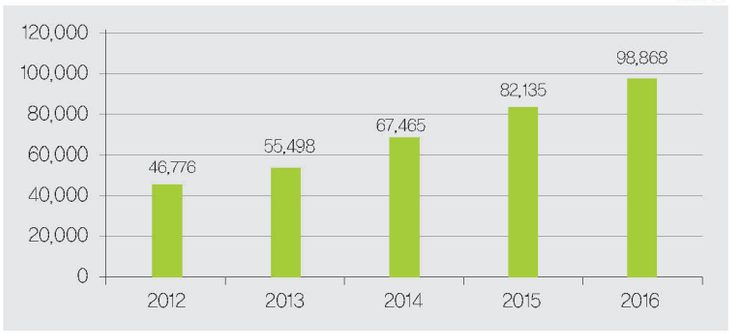
-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 확산
  -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 마련

대한민국의 울타리로 감싸 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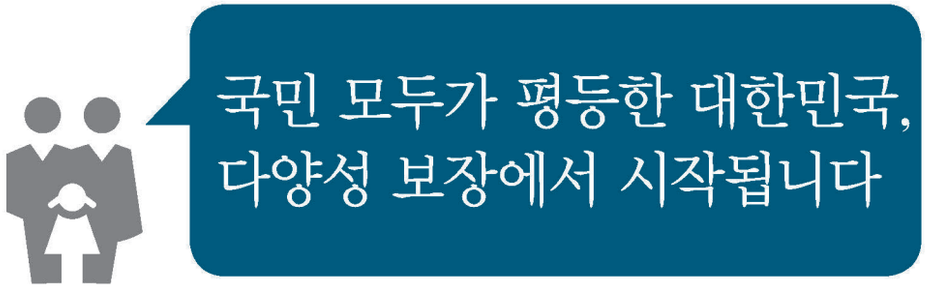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 양육부모의
보육환경 · 교육 인프라, 적응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명)



출처 : 교육통계연구센터



11 다양한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취약 · 위기가족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취약 · 위기가족 지원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 및 지역 편재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사업규모 설정 등 취약 · 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보육, 아동학습, 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 보강
-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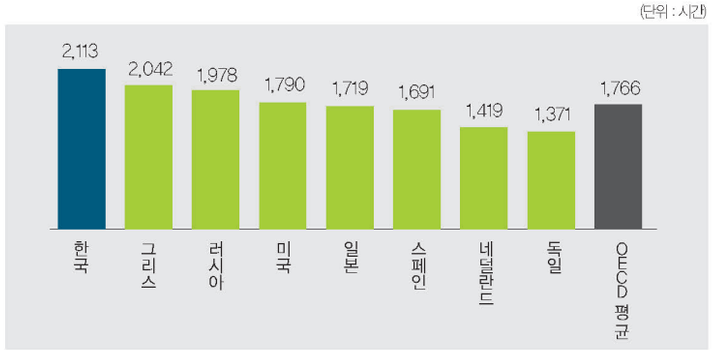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저녁·주말이 있는 삶’ 보장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단위 : 시간)



출처 : OECD(2015)



삶의 질에 만족하는
직장인의 꿈,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12 직장인(근로자)

- 노 · 사 · 정이 2010년 약속한, 연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 적극적 해소
-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 및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납품단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임금차별 해소
- 체불임금 “제로시대”
  - 체당금제도 지급 범위 확대
  - 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원이자(연20%)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
- 희망퇴직 남용 제한, 무분별한 정리해고 규제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기업내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 및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수 요건화
  -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12 직장인(근로자)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

-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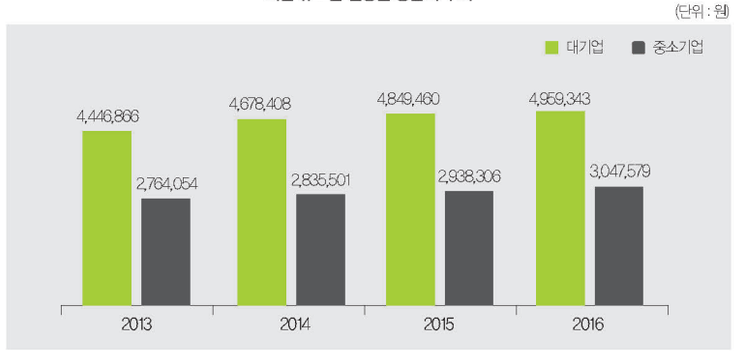
-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여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
- 연차유급휴가 2주 연속의무사용제 도입
-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도 연차유급휴가 12일 보장 우선 도입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만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질적 갑을관계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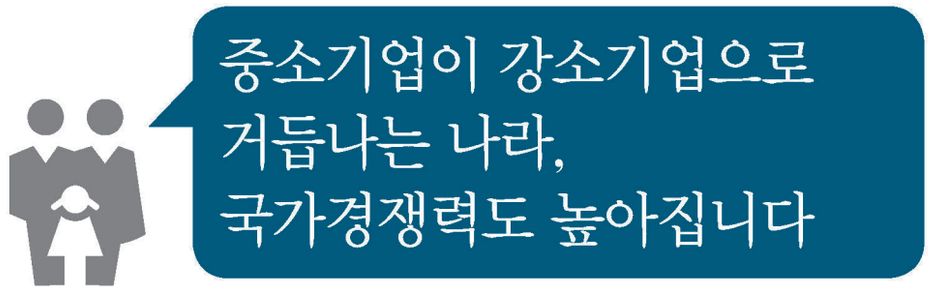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월평균 총급여 추이

(단위 : 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5~299인 사업장은 중소기업, 전체임금 근로자 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노동 통계 포털



13 중소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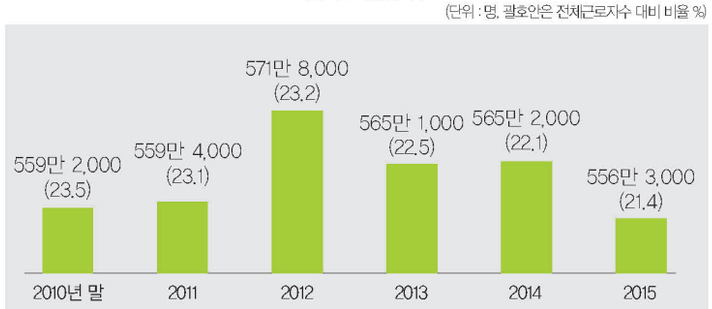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발전 ·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과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 강화
-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 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협력이익배분제를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 확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제 (적정임금) 도입 및 민간 확대

창업이 동력인 나라, 완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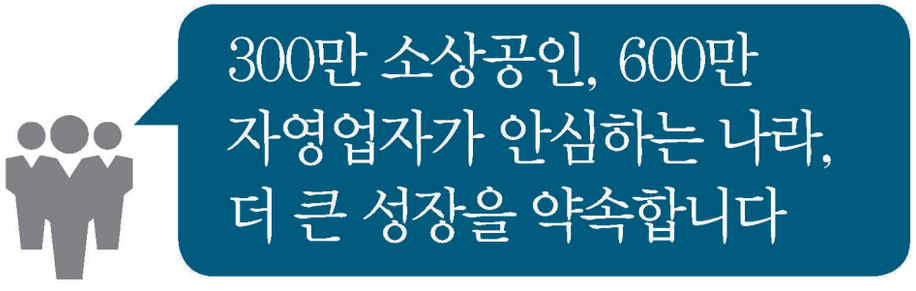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업지원 · 세제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연도별 자영업자수

(단위 : 명, 괄호안은 전체근로자수 대비 비율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4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하여 진출 억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퇴거보상제의 도입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 확대

-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입대상 확대 및 지원

14 소상공인 · 자영업자

중산층 · 서민 ·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추진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및 금액 추가 확대하여 월세 세입자 세제 지원
-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으로 중고품 거래 자영업자 지원
- 성실사업자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면제 한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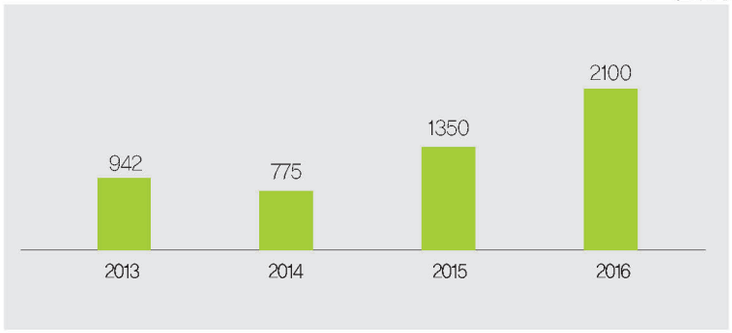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벤처 · 창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기술형 청년창업 지원하고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도별 신설 벤처기업 수

(단위 : 개)



출처 : 중소기업청

창의적 도전이 넘치는
벤처코리아(Venture Korea),
미래의 동력입니다

15 벤처 · 창업

■ 벤처 ·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신설

■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펀드 확대
-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 청년 벤처창업 ·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 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 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
- 인터넷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데이터요금 인하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 ·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 벤처 ·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Start-Up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 사업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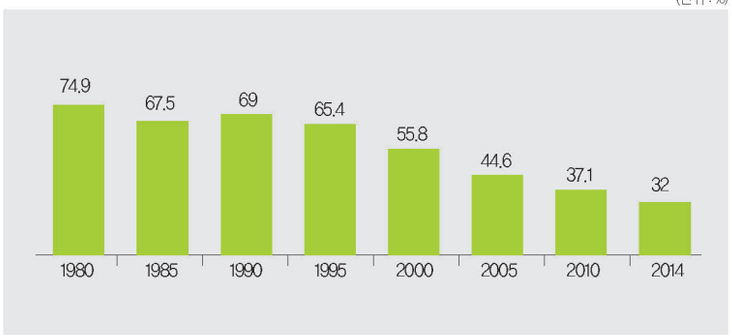
농림어업 생존 기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농림어업인의 생활인프라를 조성 · 강화하고

농림수산물 생산비용 보전, 소득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도별 농업소득률 추이

(단위 : %)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튼튼한 농림어업 토대가 식량자주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16 농림어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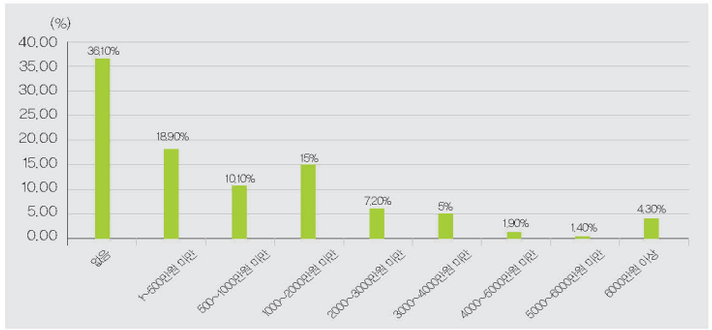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확대 개편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 · 귀농인 · 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 '100원 택시' 등 농산어촌형 마을택시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및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 · 급식시설 확대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거점 분만지원센터등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 경영주 제도 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 · 교육 · 휴가 · 질명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운영 지원
-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 및 인상을 현실화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 향상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全 도서로 확대
- 수산물 수출 촉진 및 홍보 마케팅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수출지원센터) 확대
- 감척단가 현실화로 감척 활성화 및 실직어선원 구직 지원 추진
- 어업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및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조업 신속 대응 추진
-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청년일자리 개발
-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산지은행제도 도입

‘블랙리스트’ 청산하고 예술인 처우 개선하겠습니다!

광범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생산적 복지활동의 지원으로
문화예술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예술인 예술활동 수입 비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2015



편견 · 차별 없는 지원확대가
문화예술의 꽃을 피웁니다

17 문화예술인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집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표준계약서 의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입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긴급생활자금, 상해 · 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지역 유휴 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문예창작인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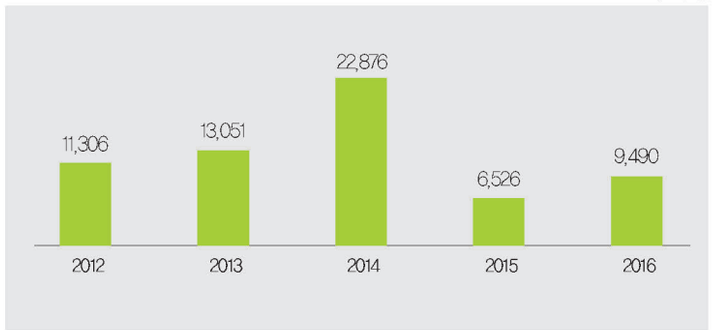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제도 정비
-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 보급사업 확대

체육인의 처우 ·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과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으로
은퇴 후 생애까지 배려하겠습니다.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

(단위 : 명)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 · 엘리트 체육의
균형잡힌 육성정책,
스포츠 강국의 지름길입니다

18 체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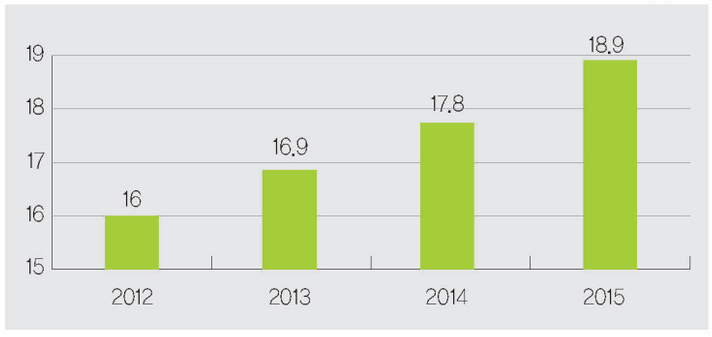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전문체육 · 생활체육 · 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사람에게 투자해 이루겠습니다!

연구자 · 연구기관에게 자율 · 책임 부여,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R&D 예산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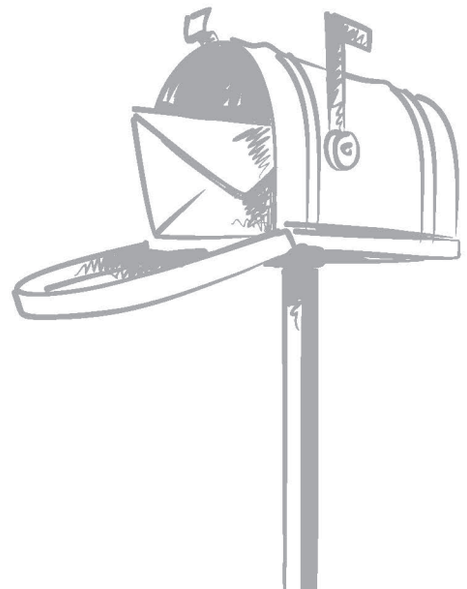
출처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초과학 중심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듭니다

19 과학기술인

-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
-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 의무화
- 청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정임금체계 마련하여 처우 개선
-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 진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 신진연구자의 과제 기반 테뉴어(Tenure) 제도 도입
-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강화
-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기초분야 개인연구자 지원 확대
- 생애 첫 실험실을 위한 최초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 지원
- 생애 지속적 연구지원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 20%에서 2배 이상 확대
- 연구실 근무 여건 개선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 마련

국민제안 현황 및 우수공약



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국민제안 현황

2017년 3월 17일 10:00 ~ 3월 30일 18:00(14일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대선공약 국민제안 게시판



■ 제안 현황 (상임위별 분류)

(17.3.30. 18시 현재)

상임위	제안 건수
운영	155
법제사법	32
정무	43
기획재정	1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11
교육문화체육	43
외교통일	32
국방	47
안전행정	4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1
산업통상	19
보건복지	48
환경노동	56
국토교통	38
정보	3
여성가족	51
합계	67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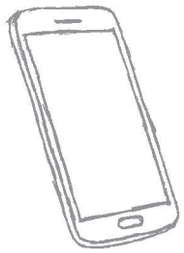
■ 국민제안 선정작 현황

구분	제안 내용
우수상	농가 전용 앱 개발
	과대 포장 금지 법안
	명절 고속도로 무료 개방
가작	공공도서관의 정규직 사서 채용 강화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마을 관광지화
	정부 및 지자체의 활동 및 예산 정보 공개 의무화

■ 국민제안 선정작 주요 내용

농가 전용 앱 개발

우수상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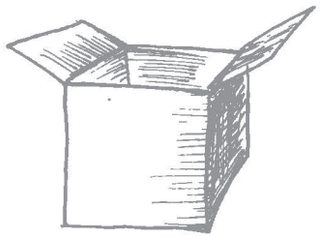
· 앱개발 : 국가 보조금 300억 투입으로 농촌 일자리 정보, 구직자 정보, 숙박 정보, 교통 정보 관련 앱 개발
· 농기계 보유 정보, 수요자 정보, 운송업자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

기대효과

· 농촌 일손 부족과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
· 귀농, 귀촌 활성화 및 귀농 실패 최소
· 농기계 공유 임대수익 및 운송업자, 수리업체, 농촌정보 수집 알바 등 부수적인 일자리와 부기가치 창출

과대 포장 금지 법안

우수상



주요내용

· 과자 등 비닐 포장의 경우 비닐 포장 최소화(질소 최소화)하고 내용물의 함량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

기대효과

·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 등의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 보존에 도움
·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는 만큼 알찬 내용물로 구성할 수 있음

명절 고속도로 무료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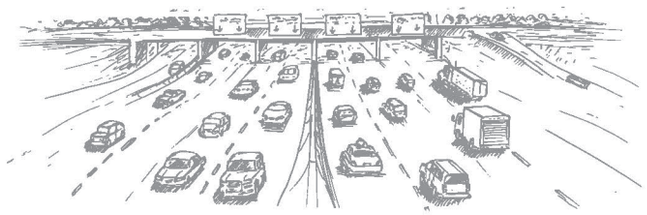
우수상

주요내용

· 주요 명절(한식, 추석, 설)에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화

기대효과

· 서민들의 명절 이동시 고속도로 무료화를 할 경우 경제 부담도 덜 수 있고 이동이 더 많아져서 경제효과 기대할 수 있음



공공도서관 정규직 사서 채용 강화

가작

주요내용

· 늘어나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정규직 사서의 수는 현저히 부족
· 부족한 사서직은 계약직, 기간제로 채용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로도 대체
· 정사서수를 늘려 일자리를 나누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작은도서관'을 맡아 순회하는 사서의 정규직 채용을 통해 도서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정규직 사서 증가로 기존 사서들의 업무 부담 경감
· 안정적인 직제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향상
· 지역 도서관이 더 많은 자료를 발굴, 추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역할 담당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관광화

가작

주요내용

· 분단국가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관광 뿐 아니라 국가안보관 확립
· 북과의 관계 개선 역할

기대효과

· 평화, 안보관에 대한 국민 교육 가능
· 국가 관리를 통한 관광 마을 조성에 도움



정부 및 지자체 활동 및 예산 정보 공개 의무화

가작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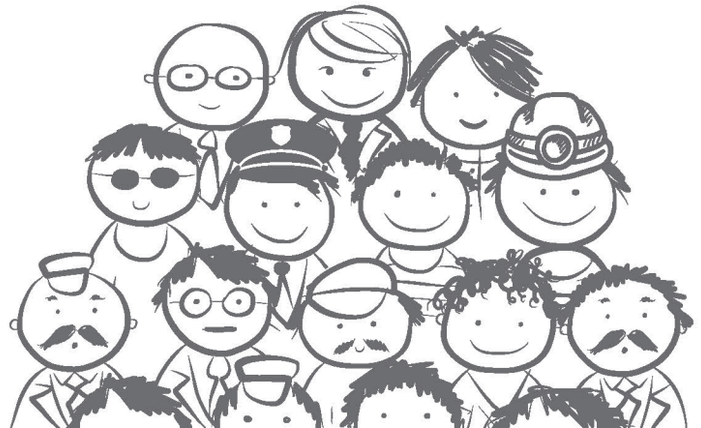
· 국가 및 지자체의 활동 및 예산 관련 정보를 부처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 공개 문서 작성할 때의 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을 법제화

기대효과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 필수 기재사항의 법제화를 통한 자의적인 문서 작성 방지
·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일자리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 ☑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취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13대 과제를 선정 ·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뽑은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분야별, 산업별, 지역별 위기상황 집중관리
-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일자리위원회와 연계 운영

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 예산 편성, 국가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 · 금융 등에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 최우선 반영

3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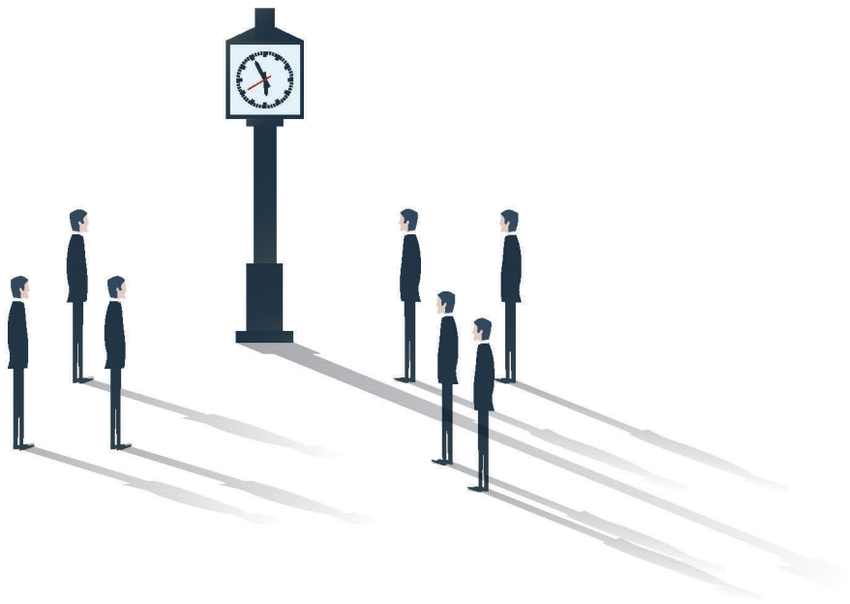
-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부족 공무원 충원계획 마련
- 요양 · 보육 ·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 공공부문 총정원제 및 인건비 제도 신축적 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 2017년도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집행 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 즉시 반영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 ☑ 중소기업 구인난 · 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4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2018년 인상률 10% 이상 실현
- 자영업 · 중소기업 보상대책 마련
  -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5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철저 준수
  -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1주일을 5일 아닌 7일로 해석)
- 근로시간 단축 피해기업에 대한 보완대책 동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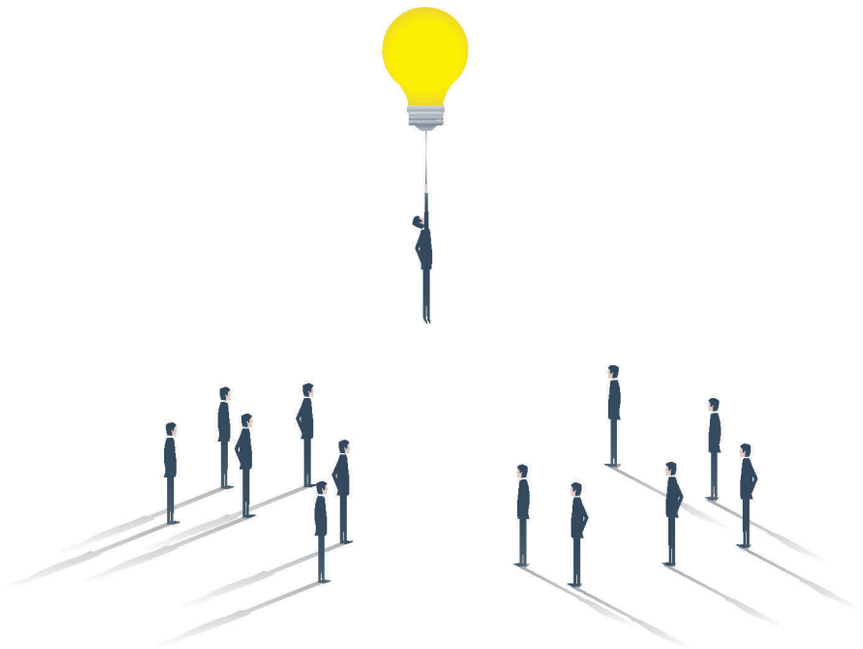
6 중소기업 구인난 · 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 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은 정부가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내는 공제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 확대
  - 미스매치 해소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제 확대, 미래장학생, 연구인력 지원 등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7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혁신기술기업, 플랫폼 및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자금 지원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의 선순환 지원
  - IPO 문턱 낮추고 벤처기업 지정요건 현실화, VC창업조건 완화, 대기업의 벤처 · 중소기업 인수시 세제혜택 등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범위 확대
- 청년창업 교육 지원 및 재도전 교육 활성화

8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5G 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스마트팩토리 확대 지원, 지능정보 기반 공공 ICT · SW 시장 창출계획 마련
- 신산업분야 융합협력 활성화 및 정책 · R&D 지원 확대

9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 법인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개인 및 연대보증 채무조정
-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운영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기반 구축
- ☑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



10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 광주형일자리 모델 확산
- 지역맞춤형일자리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지원 확대

11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취업장려금 확대 지원
- 창업여성 교육훈련 및 컨설팅 · 인큐베이팅 지원 확대
- 출산휴가 지원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직장내 성차별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12 일하는 어르신 '新중년 인생 3모작'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어르신–청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 고령자 세대의 직업 경험 및 노하우를 청년창업과 접목
-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월 22만 → 40만원)
-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13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추진 및 전담기구 설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계, 공공조달, 인력양성 계획 수립

나라를 나라답게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발행인 추미애

편집인 윤호중, 김용익

주소 (7233)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전화 02-784-4582

발행일 2017년 4월 28일

편집 디자인 · 인쇄 KPBooks